규제연구 제22권 제2호 12월

한국 규제연구의 경향분석

-연구주제 및 연구자의 경향성을 포함하여-

이수아* · 김태윤**

본 연구는 지난 20여 년간의 규제연구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규제이론 및 규제정책적 시각 등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1992년부터 2012년까지 「규제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의 공식적인 주제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지니는 연구의 지향 및 규제개혁에 대한 입장이나 관점, 전제 등을 중심으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분과학별 및 시기별로도 논문들의 경향성을 살펴보고 각 주장내지는 관점 및 입장에 대한 대표적 유형의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규제이론에 관한 입장에서는 시장지향적이며 전통적인 주장이나 관점이 대체로 수용되고 있었다. 둘째, 규제정책에 관한 입장에서는 규제나 정부의 개입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이나 관점이 내재된 연구들이 많았다. 셋째, 규제의 정치경제학적 입장인 규제기관 및 관료의 포획, 규제의 사익성, 규제의 수요 등에 대한 주장이나 관점도 대체로 수용되고 있었다. 넷째, 규제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에서는 선진국과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대조적으로 나왔다. 마지막으로 규제연구를 위한 핵심적 분과학인 행정학과 경제학 분야 논문들 간의 규제의 정당성,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하여 차별성이 존재하

* 제1저자, 한양대 행정학과 박사과정,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sua8873@naver.com)
** 교신저자,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tykiim@gmail.com)
*** 이 논문은 2013년 한양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HY-2013-G).
접수일: 2013/6/18, 심사일: 2013/9/23, 게재확정일: 2013/10/3

www.kci.go.kr

였으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규제완화 및 정부개입의 비효율성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핵심 용어: 규제연구, 규제이론, 규제정책, 규제의 정치경제학, 규제개혁, 내용분석, 연구경향

www.kci.go.kr

I. 서론: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규범적인 차원에서" 규제는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최병선, 1992: 18)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개입정책으로서 그 영역이 대단히 넓으며 개인과 기업의 많은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국내의 규제연구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인데(최병선 · 이혜영, 2001: 140), 미국이 1960년대 후반에, 영국은 1970년대 말에 규제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 동안 규제연구에 대한 국내의 관련 학계의 관심은 꾸준히 증가해 왔고,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규제연구의 질적 ·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규제연구의 전반적인 경향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특히 연구의 지향 및 규제개혁에 대한 입장이나 관점, 전제에 대한 구체적인 경향성을 살펴본 연구는 없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진정한 사회적 필요성보다는 관료의 포획이나 정치가의 정치공학적 판단에 기인하여 규제가 도입되거나 완화될 우려가 높고, 규제의 품질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이 좌지우지되며, 무엇보다도 불필요한 규제는 국민과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근원적으로 파괴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매우 진지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규제연구들이 어떠한 경향성을 갖고 있는가를 분석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은 이론적, 정책적, 일반 정치경제사회적 차원에서 무시하지 못할 상당히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내용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연구의 공식적인 주제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내면적인 관점이나 입장을 포착하는 방식으로 지난 20여 년간의 규제연구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규제이론 및 규제정책적 시각 등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www.kci.go.kr

Ⅱ. 규제연구의 경향분석을 위한 이론적 고찰

규제이론들은 사회조직과 운영의 두 가지 기본원리이자 사회문제 해결의 메커니즘인 시장(기능)과 정부(기능)의 선택과 조합의 문제를 핵심내용으로 다루며, 주로 (1) 특정 사회문제를 시장의 자율기능에 맡겨 두지 못하고 정부가 개입해서 규제해야 할 이유, 그리고 규제의 필요성과 정당성 등을 다루는 규제의 원인 이론(theory of regulatory origin), (2) 규제의 도입 및 운용 과정에서 다양한 이익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규제기관은 상반되는 정치적 압력에 어떻게 대응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다루는 규제의 정치적 과정 이론(theory of regulatory political process), (3) 규제기관과 관료의 포획(capture) 등 규제기관과 관료의 행태에 관한 이론, (4) 규제정책(혹은 규제개혁)의 결정 및 집행과정 이론 등을 주축으로 하는 광범위한 이론체계를 형성한다(최병선 · 이혜영, 2001).

각각의 분류에 대한 상세한 이론적 검토를 함에 있어서 규제연구자들의 경향을 파악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게 위의 분류를 아래와 같이 다소 변형하고자 한다. 우선 규제의 원인이론의 차원은 [규제이론에 관한 입장]으로, 규제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이론의 차원은 [규제정책에 관한 입장]으로, 그리고 규제의 정치적 과정이론과 규제기관 및 관료들의 행태에 관한 이론의 차원을 [규제의 정치경제학적 입장]으로 구분하여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연구자들이 규제정책을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의 차원에서 [규제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를 부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규제이론에 관한 입장

규제관련 논문을 발표한 규제연구자의 규제이론에 관한 경향을 파악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차별성은 아마도 규제의 정당성과 타당성이 될 것이다. 즉 규제라는 정부개입이 어떤 상황에서 정당한 것인지, 또 규제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조건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규제의 이론적 분류 등에 대하여 연구자들 간에 상당한 입장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1) 규제의 정당성

규제도입의 근거가 되는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가장 협의의 판단근거는 시장실패의 존재

www.kci.go.kr

유무이다.[1] Pigou(1938)는 외부성, 정보의 비대칭성, 경쟁의 부족 등으로 인해 시장이 실패하고, 이러한 실패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증적으로 지광석 · 김태윤(2010)은 현실의 규제, 특히 신설되는 규제가 시장실패를 이론적 근거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관찰을 보고한 바 있으며, 오히려 거래비용의 경감이라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신설규제의 수는 상당히 많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규범론의 관점에서 벗어나면, 현실의 규제는 이해관계집단이 관료제를 포획하여 가격상승, 진입장벽 등을 도모한 결과이다(Stigler, 1971).[2] 종합하면 "정부가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장실패의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가, 아니면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는가?"의 이분법적 논의로 귀결된다(지광석 · 김태윤, 2010).

(2) 규제의 타당성

규제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연구자들 간에 보편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핵심적인 사항은 규제영향분석의 기능과 보편적 도입의 필요성이다. 규제영향분석의 과정은 행정부의 규제남발을 제어하고 보다 합리적인 규제대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의 타당성은 규제영향분석 등 비용편익분석적 접근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여차민 · 김태윤, 2009).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문헌은 규제영향분석은 규제개혁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 중 하나임에 동의하고 있다(Arrow et al., 1996; Kirkpatrick & Parker, 2003; 김태윤, 2000; 노화준, 2005). 정책결정

---

1) Coase(1960)에서 비롯된 법경제학 입장에서는 시장실패는 규제가 필요한 상황적 배경에 불과하며, 규제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경쟁이 기업의 능률과 역량을 제고시키기 때문에 시장은 잠재적 실패를 해결하는데 있어 뛰어난 능력을 지니게 되는 한편, 계약은 법원에 의해 집행됨으로써 대부분의 외부성이 해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후생경제학과 법경제학의 입장이 최근에 와서 재조명되고 있다. 즉, 후생경제학과 법경제학 모두가 암묵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전제, '법원(사법부, courts)의 완전성'에 이론적, 실증적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제도적 선택의 핵심은 규제 vs. 시장이 아니라 규제 vs. 법원(또는 소송)에 있다는 입장이 대두되고 있다. 사법부의 재량성(Posner, 2008), 사법절차의 지연과 비용 등으로 인하여 판결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 결과 계약 자체의 불완전성이 심화되므로, 효율성의 관점에서는 법원의 판결보다는 보다 안정적이고 확실성이 높은 규제가 선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법치주의가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고액의 손해배상액에 부담을 느끼는 고용주들이 재판 판결의 자의성 등에 의존하며 근로현장에서의 안전 확보 의무를 게을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규제라는 명료한 사회적 기제가 없는 경우에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Shleifer, 2010).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론적인 토론을 위해서는 지광석·김태윤(2010) 참조

2) Hart(2009)는 규제란 "다른 유효한 해결방안이 존재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시장의 성과가 불만족스러울 때면 공중의 압력에 의하여 도입되는 경제위기에 대한 인기영합적인 반응에 불과하다"라고 하였다.

www.kci.go.kr

과정에서 비용편익분석의 결과는 합리적 의사결정 도구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Viscusi, 2006:1996; Hahn & Layburn, 2003; Hahn, Lutter, & Viscusi, 2000; Lutter, 1999; Morrall; 2003; 최병선, 1992:793-94). 이해관계가 얽힌 정부 규제에서 비용과 편익에 대한 인식의 편차가 발생하는 경우, 각 이해당사자들은 비용과 편익을 상이한 측정방법을 통해 측정하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게 된다. 이때 다양한 객관적 분석기법의 존재를 인정하는 가운데 정치적 협상 혹은 조정과 선택이 요구되는데(김태윤 · 김상봉, 2004:15), 비용편익분석은 이러한 정치적 협상과 조정을 구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Lutter(1999)는 국민과 의회가 때로 건강, 안전, 그리고 환경규제에 대해 잘못 이해하여 그 결과가 과장될 수 있는데, 비용편익분석은 위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제공해 주고 좀 더 균형 잡힌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Nussbaum(2000)은 비용편익분석은 인간능력의 본질적인 속성에 대한 침해를 다루게 되지만, 이러한 침해에 대한 보다 궁극적인 논의는 정치 및 공론의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용편익분석, 즉 규제영향분석의 한계는 비교적 명료하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밖에 규제영향분석을 행정실무에서 구현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규제영향분석보다는 집행가능성이 높은 표준비용기법(SCM: Standard Cost Method)[3] 등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3) 규제의 분류

규제는 일반적으로 그 특성에 따라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대별되고 있으며(최병선, 1992), 이와 같은 규제이원론은 규제연구의 관례처럼 되어 있다(Lilley & Miller, 1977; Mitnick, 1980; Greer, 1987; Ripley & Franklin, 1986; 최병선, 1992; 김영훈, 1995 등). 즉 규제의 목적이나 근거, 피규제자 등의 특성이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반면, 김태윤(2012)은 이러한 기존 규제이원론의 분류개념이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을 문제의식으로 하여, 규제의 실질적인 효과 내지는 결과 등에 주목하는 Stigler의 관점에서, 규제의 목적, 규제대상, 규제자, 대상산업, 규제자 네트워크 등이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간에 특별한 차

3) 표준비용모형(Standard Cost Model Measurement; SCM)은 특정 기간 동안 정부 부처나 국가 규제 당국으로부터 발생하는 행정부담의 측정을 목적으로 하는 모형으로써, 이는 민간기업이 정부규제에서 비롯된 정보제공 의무에 순응할 때 소요되는 시간과 그에 따른 비용을 계산하는데 이용된다(이종한(2006), “행정부담의 측정 및 국가간 비교분석”, 한국행정연구원).

www.kci.go.kr

별성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

2. 규제정책에 관한 입장

(1) 규제분류별 규제개혁의 방향성

위에서 제기한 전통적인 규제이원론적 분류에 따라 규제분류별로 규제에 대하여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즉 경제적 규제는 규제완화나 규제철폐의 대상이지만, 사회적 규제는 그 예외가 되어야 하며 오히려 강화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기존의 사회적 규제의 합리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의 문헌이 대부분이다(홍완식, 2008; 최병선, 1992; 최병선, 1993).[4)]

(2) 규제의 효과 및 결과

규제의 효과에 대한 문헌들의 입장도 다양하며, 그 결과 규제의 양적 팽창에 대한 평가 내지는 태도도 매우 대양하다. 우선 자유로운 경제적 의사결정 및 경제행위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나라의 경제성장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Rodrik et al., 2004; North, 1990; Bergson, 1992).[5)] 일례로 Loayza et al.(2005), Djankov et al.(2006), Dawson(2006) 등은 일관성 있게 규제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얻고 있다. 특히 Djankov et

4) 일례로 미국에서는 모든 경제사회문제의 근원을 규제 탓(national whipping boy)으로 돌리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사회적 규제마저 무분별하게 완화되어 국가의 기초가 흔들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도 있었다(Tolchin & Tolchin(1983), “Dismantling America: The Rush to Deregulate”, Boston:Houghton Mifflin).

5)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경제행위를 저해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규제가 왜 경제성장에 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OECD(2002)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첫째, 과도한 규제는 경제내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인센티브가 작용하도록 하여 비효율적인 투자, 고용,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게 한다. 둘째, 규제로 인하여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저해될 경우 특정경제주체가 불공정한 이득(렌트)을 누리게 되어 공정한 게임의 룰이 깨지게 된다. 셋째, 규제는 생산비용을 상승시켜 제품의 가격을 경쟁수준 이상으로 상승하게 한다. 넷째,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순응비용이 발생한다. 다섯째, 진입장벽과 같은 규제는 경쟁을 방해하고 시장지배력이 높은 기업을 형성시켜 불공정경쟁에 의한 사회적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자유로운 경제적 의사결정 및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들은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곽노선 · 김홍균 · 박정수(2008), “외환위기 이후의 금융정책에 대한 평가: 효율성과 시장친화성 기준으로”, 규제연구 제18권 제1호). 사실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힘든 규제는 오히려 기회주의적 왜곡을 부추길 수 있고 복잡한 절차는 정책지연뿐만 아니라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Feiock & Jeong, 2002; Meier, 1985). 또한 엄격하거나 복잡한 규제는 오히려 시장왜곡을 유인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생산성 감소와 규제증가는 동시에 발생한다는 경험적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Meier, 1985; Denison, 1979).

www.kci.go.kr

al.(2006)은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기업규제지수를 이용하여 기업규제의 강화가 경제성장률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지대의 관점에서 규제를 해석하여, 정부의 역할이 권리를 보호하고 계약을 집행하는 데만 제한된다면 경제적 지대는 경쟁적인 진입에 의하여 분산되지만, 정부의 역할이 이런 범위를 벗어나 확대된다면, 즉 시장의 조정과정에 정부가 개입한다면 지대의 분산과정은 정지되고 지대를 획득하려는 행동이 나타난다(Buchanan, Tollison and Tullock, 1980:8-9; Medema, 1991:1052-1053에서 재인용)는 전통적인 공공선택론적 시각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규제정책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집행될 경우, 규제는 시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 구조적 환경을 마련해 줄 시장과 경제주체에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제활동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즉 제대로 작동하는 규제는 시장 역동성을 강화시켜 국가경쟁력이나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Koedijk & Kremers, 1996)는 주장과 실증결과도 없지 않다. 또한 산업별, 사례별, 상황별로 일정한 조건하에 규제강화내지는 도입은 문제해결에 효과가 있다는 입장도 언제나 존재해왔다. 일례로 유통규제 강화를 통해 불공정 행위나 지역과점의 폐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폐해를 최소화하는 규제는 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Pilat 1997; 김성철 1997).

3. 규제의 정치경제학적 입장

(1) 규제의 정치경제: 수요와 사익성

Stigler(1971)는 지금까지 규제의 존립 근거를 제공해 온 '공공이익론(the public interest theory of regulation)'을 뒤엎고 오히려 정부규제 없이 민간자유경쟁에 맡겨 두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면서, 규제는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정당화되지 못한다는 점을 드러내었다. 같은 맥락에서 Peltzman(1976)은 정부는 선거에서 득표에 유리한 방향으로 규제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규제는 여러 이익집단의 상대적인 역학관계를 고려하여 정당, 정치가, 정부와 같은 정치행위자가 정권의 유지 및 안정 등의 자기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동기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그 결과 이익집단들이 자신들의 혜택을 위해 정치인들이나 규제기관을 통하여 규제를 만들거나 유지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자원은 사회후생손실을 야기하고, 사회후생손실은 국가자원의 낭비와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일례로 Shleifer & Vishny(1994)는 기업에 대한 진입장벽과 같은 규제는 정치인들과 관료들

www.kci.go.kr

로 하여금 지대추구행위를 강화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동일한 맥락에서 75개국의 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분석한 Djankov et al.(2000)도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규제를 통해 얻는 효용을 밝히면서, 진입규제가 심한 국가일수록 부패와 비공식 경제가 커질 뿐만 아니라 공공재화나 사적 재화의 질도 결코 나아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포획

포획이론에 따르면 규제는 규제기관과 소수의 피규제집단의 이익을 보호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Gormley(1983)는 "규제관료들을 피규제 산업의 감각을 전달해 주는 운송벨트에 불과하다"라고 하였다. 포획이론에 근거한 규제의 부정적 영향에 관한 가설은 다양한 기업, 산업 및 국제 수준의 실증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어 왔고, 그 핵심적인 주장은 시장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제가 강화되거나 규제정책의 결정 및 집행을 담당하는 관료조직의 질이 떨어질 경우 해당 산업과 국가경제는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Van Stel et al., 2004; Johnson et al., 1998).

4. 규제연구 경향성 분석의 구조

우리나라의 규제연구가 규제이론의 주요 구성요소에 따라 어떠한 경향성을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의 틀을 고안하는 과정에서, 규제이론, 규제정책, 규제의 정치경제학에 관한 이슈들을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파악하고 핵심적인 주장내지는 입장 및 관점을 개발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목적을 다소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의 이론적 관점에 부가하여, 연구자들이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제도 및 규제수준에 대하여 암묵적 또는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신뢰의 정도를 분석의 틀에 도입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개발된 규제연구들의 주장내지는 입장 및 관점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본 연구의 분석틀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www.kci.go.kr

〈표 1〉 본 연구의 분석틀: 규제연구들의 주장내지는 입장 및 관점의 경향성

분류		규제연구자들의 주장내지는 입장 및 관점
규제 이론에 관한 입장	규제의 정당성	규제의 정당성은 시장실패에서 비롯된다
	규제의 타당성	규제의 타당성은 RIA 등 비용편익분석적 접근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규제의 분류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를 구분한다
규제 정책에 관한 입장	규제분류별 규제개혁의 방향성	경제적 규제는 줄이고, 사회적 규제는 늘려야 한다
	규제 및 규제완화의 필요성	가능한 한 규제는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규제의 효과 및 결과	규제를 통하여 국가의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규제의 정치 경제학적 입장	규제기관 및 관료의 포획	규제기관이나 관료는 포획된다
	규제의 사익성	규제관련 이익집단은 사익추구 행위를 한다
	규제의 수요	일반국민이나 정치가들은 규제를 선호하여 수요한다
규제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	규제개혁제도에 대한 평가	선진국의 규제개혁제도를 신뢰한다
	규제수준 및 품질에 대한 평가	선진국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규제의 수준은 낙후되지 않았다
	규제개혁제도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제도를 신뢰한다
	규제수준 및 품질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의 규제의 수준은 일반적으로 낙후되지 않았다

III. 연구의 설계

1. 분석방법

논문에는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자의 견지가 암묵적이라도 드러나게 된다. 본 연구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해, 규제연구의 경향성을 연구의 지향 및 규제개혁의 주된 주장/입장/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내용분석은 "사람들의 의사소통 내용 기록에 대한 분석"으로,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무슨 이유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효과를 노리고 하는가?'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준다(고성호 외 역 · Earl Babbie저, 2007: 447-448). 김경동 · 이온죽(1995)도 내용분석은 "인간의 상징적 기호로 표현된 의사소통의 기록물의 내용적 특성

www.kci.go.kr

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나아가 그 동기나 원인 및 결과나 영향을 체계적으로 추론하려는 사회과학의 분석기법"이라 하였다. 따라서 내용분석은 "특정한 메시지가 가진 특성을 객관적·체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추론하는데 사용되는 기법"(Holsti, 1969: 14)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분석방법이라 판단된다. 또한 내용분석은 실험이나 조사연구와는 달리 언제든지 절차적 오류의 재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방법론적으로 안전하며, 반복적 조사를 할 수 있어 연구대상을 훼손하지 않고 경험적 연구가 가능하다(Woodrum, 1984)는 장점을 지닌다.

2. 분석대상

(1) 분석대상의 개요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1992년에 창간호부터 2012년 제21권 제2호에 걸쳐 「규제연구」[6]에 게재된 논문들이다. 「규제연구」는 규제와 관련된 주제를 가진 논문들만 싣고 있고 다양한 분과학 배경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정보와 지식을 교환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주요전문학술지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규제연구」의 기고논문의 내용과 연구방법은 규제 연구 경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단, 특집, 동향, 정책과제, 규제포럼, 초점, 사례연구, 기념논단, 부록, 특별기고, 권두언, 보고서 요약 등 142편의 원고들은 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이론적 검토가 없고, 참고문헌이 부재하는 등 일반적인 학술논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규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4편[7]도 제외하였다. 결국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연구논문 및 특

6) 「규제연구」는 1992년 한국경제연구원이 규제완화에 대한 인식확산과 규제관련연구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창간된 후 1995년 「규제연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2년 한국규제학회가 창립됨에 따라 2002년 제11권 제2호부터 한국규제학회와 한국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간되고 있다.

7) 전성훈·황윤재(2010)의 "이랜드-까르푸(2006년) 기업결합의 경쟁효과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분석"은 기업결합의 경쟁효과에 대한 경제분석을 시도한 논문이며, 강순희(2010)의 "실업자 훈련 종류별 노동시장 성과의 비교"는 실업자 훈련을 대상 등에 따라 나누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증의 일환으로 세부 훈련 종류별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분석하였다. 김정유(1997)의 "보완제품시장에서의 진입저지와 진입유도"는 정보가 없는 잠재적 진입기업이 사적 정보를 가지고 상호보완재를 생산하는 기존기업들이 존재하는 산업 내의 하나의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수학적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우관(1997)의 "금융체제의 효율성과 금융·기업의 관계"는 금융이 자금의 동원과 배분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업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즉, 이 논문들은 기업결합, 실업자 훈련, 보완제

www.kci.go.kr

별논문 280편이 되는바, 이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을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연구의 분석대상

구분		논문 수(편)	비중(%)
전체 대상 논문	「규제연구」에 게재된 원고	426	100.0
제외 논문	특집	72	16.9
	동향	20	4.7
	정책과제	15	3.5
	규제포럼	9	2.1
	초점	8	1.9
	사례연구	7	1.6
	기념논단	5	1.2
	부록	3	0.7
	특별기고	1	0.2
	권두언	1	0.2
	보고서 요약	1	0.2
	규제 미관련 연구논문	4	0.9
	소계	146	34.3
분석대상		280	65.7

(2) 분석대상 논문들의 일반적인 속성: 기존문헌의 분석대상과의 비교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규제연구의 경향성을 살펴본 최병선 · 이혜영(2001)과 이민창(2003)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이 두 연구는 동일한 분류기준으로 연구주제 및 연구영역별 규제연구의 경향을 살펴보고 있는데, 최병선 · 이혜영(2001)은 1992년부터의 「한국행정학보」, 「한국정책학보」, 「한국정치학회보」, 「한국행정연구」, 「행정논총」에 게재된 논문, 그리고 주요 대학의 박사학위 논문 등 총 48편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1990년대 초반 이래 국내의 행정학자, 정책학자들에 의해 수행되어 온 규제 및 규제정책 연구에 대한 특징을

품시장, 금융의 기능 등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 규제와 관련된 지식을 창출하는 데는 틀림이 없으나 직접적으로 규제와 관련된 본격적인 규제연구와는 다소 이질적이라고 판단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www.kci.go.kr

살펴보고 있다. 또한 이민창(2003)은 1990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행정학보」, 「한국정책학보」, 「한국정치학회보」, 「한국행정연구」, 「행정논총」, 「경제학연구」, 「규제연구」에 게재된 논문과 박사학위논문 등 총 111편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1990년부터 10년간의 규제연구가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두 연구들은 행정학 및 정책학 분야에서의 규제연구의 경향을 분석하는 것에 중점을 둔 반면, 본 연구는 다양한 분과학의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규제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차별성이 있다.

참고로 최병선·이혜영(2001)과 이민창(2003)의 규제연구의 연구주제 및 연구영역별 분류에 따라,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규제연구」 280편의 논문들을 유형화 하여 두 연구와 비교해 보면 다음 <표 3>과 <표 4>와 같다.

〈표 3〉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규제연구의 연구주제 및 연구영역별 분류 비교

연구주제			본 연구				최병선·이혜영(2001)				이민창(2003)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규제 및 규제 개혁일반	소계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규제 및 규제 개혁일반	소계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규제 및 규제 개혁일반	소계
연구영역	규제정책에 관한 기준	정책결정 과정	2	2	0	4	0	7	2	9	3	9	3	15
		정책집행 과정	0	1	2	3	2	7	0	9	8	8	2	18
	규제행위자에 관한 기준	이익집단 및 공익단체	4	0	1	5	0	2	0	2	2	2	0	4
		규제 기관과 관료의 행태	1	1	2	4	2	2	4	8	2	2	8	12
	규제원인과 수단에 관한 기준	규제효과 및 개선방안	67	17	19	103	3	2	1	6	17	4	6	27
		정책수단	33	17	14	64	0	3	0	3	5	9	5	19
	기타		40	7	50	97	0	4	7	11	1	5	10	16
전체			147	45	88	280	7	27	14	48	38	39	34	111

www.kci.go.kr

〈표 4〉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규제의 세부유형별 분류 비교

대분류	소분류	본 연구	최병선 · 이혜영(2001)	이민창(2003)
경제적 규제*	진입규제	24	4	19
	가격규제	16	4	17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규제	92	0	0
	품질규제	12	0	0
	기타 경제적 규제 전반	3	0	0
	소계	147	8	36
사회적 규제	환경규제	18	14	19
	산업안전 및 보건규제	5	5	5
	소비자안전규제	13	1	4
	사회적 차별규제	6	0	0
	교통안전규제	1	2	3
	위험과 위험의 관리	2	5	5
	소계	45	27	36

* 본 연구에서는 연구주제 중 경제적 규제의 세부 분류에 있어, 진입규제와 가격규제만으로 논문들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최병선(1992)의 분류를 참고하여 경제적 규제의 세부유형에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규제', '품질규제', '기타 경제적 규제 전반'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 최병선 · 이혜영(2001)과 이민창(2003)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규제 논문에서 2개 이상의 세부규제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해당란에 모두 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의 연구주제별 현황을 보면,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는 각각 147편과 45편으로 경제적 규제에 대한 논문이 많다. 반면에 최병선 · 이혜영(2001)은 연구주제별로는 경제적 규제가 7편, 사회적 규제가 27편으로 사회적 규제 관련연구가 많았고, 이민창(2003)은 경제적 규제 38편, 사회적 규제가 39편으로 유사한 정도의 분포를 보였다. 연구영역별로는 규제원인과 수단에 관한 기준인 규제효과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103편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책수단에 관한 논문이 64편으로 많았다. 반면에 최병선 · 이혜영(2001)은 규제정책에 관한 기준인 정책결정과정과 정책집행과정에 관한 연구가 각각 9편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규제행위자에 관한 기준인 규제기관과 관료의 행태에 관한 연구가 8편으로 많았다. 이민창(2003)은 본 연구와 같이, 규제원인과 수단에 관한 기준인 규제효과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27편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책수단에 관한 논문이 19편으로 많았다. 최병선 · 이혜영(2001)과 이민창(2003)의 연구는 비슷한 시기의 논문들을 분석

www.kci.go.kr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차이가 나는데, 이는 이민창(2003)의 연구가 「경제학연구」와 「규제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 역시 분석대상인 「규제연구」에 경제학자들이 논문을 많이 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연구들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민창(2003)도 밝혔듯이, 행정학자와 정책학자의 규제에 대한 연구경향이 경제학자들의 연구초점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분석대상 논문들의 기타 속성

본 연구의 분석대상의 전공분야별 논문 게재 현황을 살펴보면, 경제학을 전공한 연구자들의 논문이 141편으로 가장 많고, 행정학이 49편, 법학이 43편으로 나타났다. 다저자의 경우, 주저자의 전공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기타 전공분야로는 도시계획학, 도시공학, 교육학, 사회학 등이 있었다.

〈표 5〉 분석대상의 전공분야별 게재 현황

구분	논문 수(편)	비중(%)
경제학	141	50.4
행정학	49	17.4
법학	43	15.4
경영학	33	11.8
정치학	4	1.4
기타	5	1.8
알 수 없음	5	1.8
합계	280	100.0

연구방법으로는 양적 연구가 86편, 질적 연구가 194편으로 질적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졌으며, 그 중 사례 및 이슈 분석의 방법을 사용한 논문이 170편으로 가장 많았다. 양적 연구의 경우 대부분 2차 자료를 이용한 논문이 많았다.

www.kci.go.kr

〈표 6〉 분석대상의 연구방법별 게재 현황

중분류	소분류	논문 수(편)	비중(%)
양적 연구	설문조사	12	4.2
	2차 자료	71	25.4
	실험연구	3	1.1
	소계	86	30.7
질적 연구	사례 및 이슈 분석	170	60.7
	문헌자료(판례문 등)	15	5.4
	기타	9	3.2
	소계	194	69.3

연구의 저자유형별로는 단독 연구가 221편으로 가장 많았고, 공동연구는 59편이었다. 연구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은 외부지원 14편, 교내 지원 20편으로 총 34편이었다.

〈표 7〉 분석대상의 저자유형별 게재 현황

구분	단독	공동				전체
		2인	3인	4인 이상	소계	
논문 수(편)	221	41	14	4	59	280
비중(%)	78.9	14.6	5.0	1.4	21.1	100.0

〈표 8〉 분석대상의 연구지원 유무별 게재 현황

구분	논문 수(편)	비중(%)
외부지원	14	5.0
교내지원	20	7.1
지원받지 않음	246	87.9
전체	280	100.0

www.kci.go.kr

3. 분석절차

본 연구의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분석을 하기 위한 분석기준과 색인어를 설정한다. 색인어는 각 분석항목의 주된 주장내지는 입장 및 관점에 대한 근거가 되는 이론과 연구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을 추출하였고, 코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을 추가시켜가며 최종 결정하였다. 분석항목과 색인어를 정리하면, 다음 <표 9>와 같다. 분석항목에 대한 확인(평가)은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단 분명하게 대조되는 경우에는 3점 척도(5점, 3점, 1점)로 구성하였다. 점수에 대한 해석의 용이성을 위하여 전통적으로 규제연구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정 및 전제나 규제개혁(완화)적인 지향을 가진 경우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설정하였다.

〈표 9〉 내용분석을 위한 분석항목과 색인어

분석항목				색인어
주장/입장/관점	점수	유형	주된 주장/입장/관점의 예시	
규제이론에 관한 입장				
규제의 정당성은 시장실패에서 비롯된다.	5	규제는 시장실패외의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	-규제는 시장실패(자연독점, 외부효과(외부성), 정보비대칭성, 공공재)에 의해서만 도입되어야 한다고 명시하는 경우	• 정부개입, 정당성, 목적, 규제의 이론적 근거, 규제의 도입목적, 규제 형성 목적 • 시장실패(독점, 외부성/외부효과,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 • 공익, 공공의 이익, 국민 후생, 건강, 정부의 판단(감시, 통제, 불공정, 회피, 불법, 악용, 오용), 거래비용, 금융안정, 정치적 편의, 국민들의 요구
	4	규제는 시장실패에 의해서 도입된다.	-규제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시장실패(자연독점, 외부효과(외부성), 정보비대칭성, 공공재)에 의해서 도입된다고 보는 경우	
	3	판단유보/해당 주장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음.		
	2	규제의 정당성의 근거로는 시장실패이외에도 다른 많은 것들이 있다. 규제는 공익, 공공의 이익, 정부의 판단 등에 의하여 도입되어야 정당성이 있다.	-규제는 시장실패(자연독점, 외부효과(외부성), 정보비대칭성, 공공재) 이외의 요인들에 의해서도 도입될 수 있다고 명시하는 경우(ex> 거래비용, 공익, 정부의 판단 등)	

www.kci.go.kr

분석항목				색인어
주장/입장/관점	점수	유형	주된 주장/입장/관점의 예시	
	1	규제는 시장실패외의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만 도입된다.	-시장실패(자연독점, 외부효과(외부성), 정보비대칭성, 공공재)에 의해 규제가 도입된다는 가설을 완전히 반대하는 경우 -시장실패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도입되는 것이라고 명확히 언급하고 있는 경우	
규제의 타당성은 RIA 등 비용편익 분석적 접근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5	규제의 타당성은 근본적/기본적으로 비용편익분석 등과 같은 사회후생 극대화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규제 도입 및 규제 검토에 있어서 규제가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비용편익분석이나 규제영향분석 등을 실시해야/중요하다고 보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이나 비용편익분석이 실시되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이 초래된다고 보는 경우 -전반적으로 규제영향분석이나 비용편익분석(비용효과분석)등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언급하는 경우	• 비용, 편익, B/C 분석(BC분석) • 규제영향분석, RIA, 사회총후생 • 화폐화, 계량화 • 타당성 조사, 공리적, 심사
	3	판단유보/해당 주장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음.		
	1	규제의 타당성은 비용편익분석 등과 같이 공리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규제 도입 및 규제 검토에 있어서 규제가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비용편익분석이나 규제영향분석 등의 방법이 합리적/효율적/형평적이지 않다는 등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규제 도입 및 규제 검토에 있어서 비용편익분석 등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경우 -규제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용편익분석 등의 공리적인 방법이 아닌 전혀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를 구분한다.	5	규제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분되며, 이 둘은 상당한 차별성이 존재한다.	-경제적 규제나 사회적 규제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그 성격이 상이함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경우	

www.kci.go.kr

분석항목				색인어
주장/입장/관점	점수	유형	주된 주장/입장/관점의 예시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를 구분한다.	4	규제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분된다.	-경제적 규제나 사회적 규제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 경제적 규제(경제규제, 경제 규제), 사회적 규제(사회규제, 사회 규제) • 규제분류, 규제 유형
	3	판단유보/해당 주장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음.		
	2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를 구분하기 모호한 규제가 있다.	-경제적 규제나 사회적 규제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 둘이 혼합되어 있거나 중복되어 있어 확실히 구분하기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경우	
	1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는 특별한 차별성이 없다.	-경제적 규제나 사회적 규제가 차이가 없음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경우	
규제정책에 관한 입장				
경제적 규제는 줄이고, 사회적 규제는 늘려야 한다.	5	규제정책적으로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를 구분하여 접근해야 한다.	-경제적 규제는 줄여야 하고, 사회적 규제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혹은 그 반대인 경우	• 경제적 규제(경제규제, 경제 규제), 사회적 규제(사회규제, 사회 규제)
	3	판단유보/해당 주장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음.		
	1	규제정책적으로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를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없다.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를 구분해서 집행할 필요/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를 구분해서 집행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능한 한 규제는 만들지 말아야 한다.	5	규제의 신설은 지양해야 한다. 규제는 완화 및 폐지되어야 한다.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부는 개입을 하면 안 된다(억제해야한다)고 명확히 언급하는 경우 -규제 대신 민간 등의 해당 주체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규제의 신설 및 정부의 개입과 관련하여 우려의 입장이 분명히 밝혀져 있는 경우	• 규제완화, 규제강화, 규제폐지 • 민영화, 민간위탁, 작은 정부, 자율(적) • 줄여(야 한다), 늘려야 한다, 만들지(말아야 한다/어야 한다), 신설(하지 말아야 한다/해야 한다), 없애
	4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지양해야	-비효율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규제의 신설이나 정부의 개입은 안 된	

www.kci.go.kr

분석항목				색인어
주장/입장/관점	점수	유형	주된 주장/입장/관점의 예시	
		한다.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완화되어야 한다.	다(정부의 억제해야한다)고 언급하는 경우 * 5점의 경우, 규제는 무조건 신설이 지양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4점은 불필요한 규제는 신설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경우임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 및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야 (한다), 정부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해야 한다/필요하다) • 한시적 규제유예, 규제일몰제
	3	판단유보/해당 주장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음.		
	2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하나 그 과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규제 신설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규제는 합리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품질 높은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는 경우 *4점의 경우,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한 것을 없애야 한다 혹은 완화해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둔 반면에 2점은 기본적으로 규제 신설 및 강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입장임	
	1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규제를 신설 및 강화해서 대응해야 한다.	-사회문제 해결수단 중 규제가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	
규제를 통하여 국가의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5	규제를 통하여 국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규제의 도입이나 적용으로 인해 문제가 더 커졌거나 해결되지 않았고, 혹은 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표현이 언급된 경우 -국가의 문제 해결을 위해 더 효율적이라며 규제외의 다른 수단(민간위탁, 민영화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	• 국가의 문제, 규제 도입, 문제 해결, 역할, 기대 • 효율성 달성(떨어뜨렸다), 형평성 추구 • 공익실현, 교차보조
	4	계획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규제는 국가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규제는 국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보는 경우	

www.kci.go.kr

분석항목				색인어
주장/입장/관점	점수	유형	주된 주장/입장/관점의 예시	
	3	판단유보/해당 주장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음.		
	2	규제를 통하여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일시적/단기적으로나마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규제가 특정분야에서라도 어느 정도 혹은 일시적으로나마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경우	
	1	국가가 당면한 문제는 규제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규제의 도입이나 적용으로 인해서 국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 -경험적 사례 등에 있어서 규제의 도입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제시하는 경우 -국가의 문제 해결을 위해 효율적/합리적인 수단이 규제라고 보는 경우	
규제의 정치경제학적 입장				
규제기관이나 관료는 포획된다.	5	규제기관이나 관료는 자체적인 사익이나, 외부의 이익관계에 종속되어 규제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관료의 재량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규제기관이나 관료는 자체적인 사익이나, 외부의 이익관계에 종속되어 규제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 -규제기관이나 관료는 자체적인 사익이나, 외부의 이익관계(집단)에 포획될 가능성이 있거나 되었다고 언급하는 경우 -관료의 재량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거나 한다고 보는 경우	• 관료, 규제자, 공무원, 정부종사자, 규제기관 • 포획, 압력, 종속, 재량 • 의사결정(의사결정)
	3	판단유보/해당 주장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음.		
	1	규제기관이나 관료는 공익에 입각하여 규제를 입안하며, 그 집행에서도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집무한다.	-규제기관이나 관료는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고 공익을 위하여 규제를 입안 및 집행한다고 보는 경우 -규제기관이나 관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집무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집무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경우는 이와 다름, 공정하게 집무를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는 입장이 될 수 있으므로 정반대의 입장일 수 있음	

www.kci.go.kr

분석항목				색인어
주장/입장/관점	점수	유형	주된 주장/입장/관점의 예시	
규제관련 이익집단은 사익추구 행위를 하므로, 현실의 규제는 이러한 사익추구행위의 결과이다.	5	규제관련 이익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며, 현실의 규제는 이러한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규제관련 이익집단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고 언급하는 경우 -규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개입된다거나 이해관계 구조를 가진다는 것을 언급하는 경우	• 이익집단, 이익단체 • 상호작용 • 사익, 사익추구, 이해(관계/관계자)
	3	판단유보/해당 주장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음.		
	1	규제관련 이익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현실의 규제형성에 있어서 실제로는 이익집단들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일반국민이나 정치가들은 규제를 선호하여 수요한다.	5	일반국민이나 정치가들은 규제를 선호하여 사실상 수요한다.	-일반국민이나 정치가들은 규제를 선호한다고 보는 경우 -일반국민이나 정치가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바대로 규제를 도입하고자 노력한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규제는 정치인, 국민들의 요구, 정치적 편의 등에 의해서 도입된다고 보는 경우	• 일반국민, 정치가/정치인, 의회, 유권자 • 규제 선호, 수요 • 순투표 극대화, 재선가능성(재선출) 극대화, 선거, 당선
	3	판단유보/해당 주장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음.		
	1	일반국민이나 정치가들은 규제를 선호하지 않는다.		
선진국의 규제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				
선진국의 규제개혁제도를 신뢰한다.	5	선진국의 규제개혁제도는 나름대로의 역사성과 사회성을 개입된 가운데, 상당히 높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선진국의 제도나 규제개혁을 소개 및 언급하면서 그 제도의 우수성을 비용 등의 정확한 근거를 들고 있는 경우 -선진국의 제도나 규제개혁을 대안으로 제시하거나 롤모델로 삼고 있는 경우	• 선진국(미국, 유럽, 영국, 일본, OECD 국가 등) • 규제개혁(규제개혁), 규제체계, 평가 • 선진(적이다/적

www.kci.go.kr

분석항목				색인어
주장/입장/관점	점수	유형	주된 주장/입장/관점의 예시	
		선진국의 규제개혁제도는 신뢰할 수 있다.	-선진국의 제도나 규제개혁을 우수하다/효율적이다/합리적이다 등의 긍정적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경우	이지 않다), 신뢰(한다/하지 않다), 체계(적이다/적이지 않다), 합리(적이다/적이지 않다) • 긍정(적), 부정(적)
	3	판단유보/해당 주장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음.		
	1	특별히 선진국의 규제개혁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	-선진국의 제도나 규제개혁을 언급하면서 그 제도가 잘못된 것임을 정확한 근거를 들고 있는 경우 -선진국의 제도나 규제개혁을 비효율적이다/비합리적이다 등의 부정적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경우	
선진국의 일반적인 규제의 수준은 낙후되지 않았다.	5	선진국의 일반적인 규제의 수준은 낙후되지 않았다./높은 편이다.	-선진국의 규제자체가 혹은 규제의 수준 및 품질이 우수/효율/합리/체계적이다 등의 긍정적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경우	• 선진국(미국, 유럽, 영국, 일본, OECD 국가 등) • 규제수준, 규제품질 • 평가, 낙후(되었다/되지 않았다)
	3	판단유보/해당 주장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음.		
	1	선진국의 일반적인 규제의 수준은 낙후되어 있다.	-선진국의 규제자체가 혹은 규제의 수준 및 품질이 비효율적이다/비합리적이다 등의 부정적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경우	
우리나라의 규제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제도를 신뢰한다.	5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체계내지는 제도는 선진적이며 합당하다.	-우리나라의 제도나 규제개혁이 선진국과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거나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언급하고 있는 경우 -우리나라의 제도나 규제개혁을 언급하면서 그 제도의 우수성을 비용 등의 정확한 근거를 들고 있는 경우 -우리나라의 제도나 규제개혁을 우수하다/효율적이다/합리적이다 등의 긍정적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경우	• 우리나라(우리나라), 한국 • 규제개혁(규제개혁), 규제체계, 평가 • 선진(적이다/적이지 않다), 신뢰(한다/하지 않다), 체계(적이다/적이지 않다), 합리(적이다/적이지 않다) • 긍정(적), 부정(적)
	3	판단유보/해당 주장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음.		
	1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체계내지는 제도는 뒤떨어져 있거나, 내용이나	-우리나라의 제도나 규제개혁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지 않거나 일정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 및 제안하고 있는 경우	

www.kci.go.kr

분석항목				색인어
주장/입장/관점	점수	유형	주된 주장/입장/관점의 예시	
		실질이 형식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도나 규제개혁을 언급하면서 그 제도가 잘못된 것임을 정확한 근거를 들고 있는 경우 -우리나라의 제도나 규제개혁을 비효율적이다/비합리적이다 등의 부정적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경우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규제의 수준은 낙후되지 않았다.	5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규제의 수준은 낙후되지 않았다./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규제자체가 혹은 규제의 수준 및 품질이 우수/효율/합리/체계적이다 등의 긍정적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경우	• 우리나라(우리나라), 한국 • 규제수준, 규제품질 • 평가, 낙후(되었다/되지 않았다)
	3	판단유보/해당 주장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음.		
	1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규제의 수준은 낙후되어 있다.	-국민들의 규제의 체감도가 낮거나 규제품질 및 수준이 낮다고 언급되어 있는 경우 -우리나라의 규제자체가 혹은 규제의 수준 및 품질이 비효율적이다/비합리적이다 등의 부정적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경우	

코딩을 위한 사전 준비를 위하여 일차적으로 예비코딩을 수행할 6명의 분석원들에게 코딩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저자들이 중심이 되어 분석원들과 코딩과정에 사용될 분석기준 및 항목, 코딩방법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몇 차례의 토론의 과정을 거쳤다. 코딩은 HWP파일이나 PDF파일 형태의 논문에서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색인어를 넣고 검색하여, 색인어를 포함하는 문장 혹은 전후 문맥을 해석한 뒤, 분석항목의 유형과 예시들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띄어쓰기나 조사 등에 의해 검색이 제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 <표 9>의 색인어에 밑줄 친 것처럼 어근을 중심으로 색인어를 검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코딩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오류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자를 포함한 2인이 중복적으로 코딩결과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또 다른 1인이 검토하였다. 일부 해석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가 있어, 조작적 정의를 보강하여 다시 적용하는 과정을 거쳐 분석결과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www.kci.go.kr

IV. 분석결과: 규제연구의 경향성

본 절에서는 규제이론적 분석틀에 입각하여, 규제연구의 경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분석항목에 따라서는 논문이나 연구자의 입장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바, 이러한 경우 '판단유보 내지는 해당 주장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음'으로 분류하였고, 이 경우에는 그 빈도에 대한 설명이나 사례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1. 규제이론에 관한 입장

(1) 규제의 정당성: 규제의 정당성은 시장실패에서 비롯된다

'규제의 정당성은 시장실패에서 비롯된다'는 관점의 전체 평균은 3.22점으로, 규제는 독점, 외부효과(외부성), 정보비대칭성, 공공재 등 시장실패에 의해서 도입된다는 전통적인 입장이 비교적 높이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규제는 시장실패에 의해서 도입된다(4점)'는 관점이 87편으로 가장 많았다. '규제의 정당성의 근거로는 시장실패 이외에도 다른 많은 것들이 있다(2점)'가 42편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규제는 시장실패 외의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5점)'는 관점도 11편이 있었다.

〈표 10〉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의 경향

점수(점)	경제학		행정학		기타		전체	
	논문 수(편)	비율(%)	논문 수(편)	비율(%)	논문 수(편)	비율(%)	논문 수(편)	비율(%)
5	4	2.84	4	8.16	3	3.33	11	3.9
4	50	35.46	11	22.45	26	28.89	87	31.1
3	70	49.65	22	44.90	45	50.00	137	48.9
2	16	11.35	10	20.41	16	17.78	42	15.0
1	1	0.71	2	4.08	0	0.00	3	1.1
전체	141	100.00	49	100.00	90	100.00	280	100.0
평균	3.28		3.10		3.18		3.22	

각 유형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는 시장실패 외의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5점)'의 유형이다. 최진욱 · 구교준(2009)은 "통신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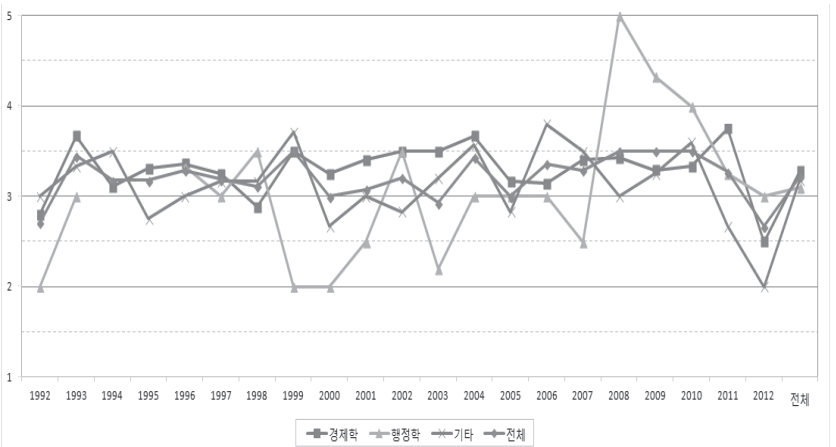
위원회 행정제재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규제는 국가가 시장실패를 치유하거나 시장실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다'라고 하였으며, 김은자(1995), 이종한 · 최진식(2012) 등도 유사한 입장이었다. 둘째, '규제는 시장실패에 의해서 도입된다(4점)'의 유형이다. 이용환(2000)은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 중간 평가"에서 '정부규제 논거는 공익설에 근거한다. 공익설은 대체적으로 자연독점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전제로 한다.'고 하였으며, 이혁우 외(2011), 김성준(2002), 곽노선 · 김홍균 · 박정수(2008) 등도 유사한 입장이었다. 셋째, '규제의 정당성의 근거로는 시장실패 이외에도 다른 많은 것들이 있다(2점)'의 유형으로, 규제 도입의 정당성을 공익, 정부의 판단 등에서 찾는 경우이다. 이혁우(2012)는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에서, '규제를 단순히 그 때 그 때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차원에서 사회 안의 사람들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줄여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허석균(2012)은 "DTI, LTV 및 대출상환 조건이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는 금융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수단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라고 하였다. 소성규(2002), 김은자(1995) 등도 유사한 입장이었다.[8)]

한편 분과학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규제연구들의 경향성을 살펴보면 <그림 1>과 같으며, 지난 20여 년 동안 규제연구에서 규제의 정당성은 시장실패에서 비롯된다는 관점이 일반적으로 수용되어져 왔다고 할 수 있겠다. 행정학 분과의 경우, 1994년과 1995년에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규제연구가 없었고, 이 두 해를 제외하고 나면 시간이 흐를수록 규제의 정당성의 근거로서 시장실패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경제학 분과 논문은 시점과 무관하게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8) 참고로 현실의 규제는 시장실패 외의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만 도입된다는 입장에서, 최병선(2003)은 "규제문화의 연구: 정치문화이론의 적용가능성"에서 '일반국민의 규제(정책)에 대한 선호와 태도는 경제학자들이 규제와 논거로서 제시하고 있는 시장실패이론과는 거의 아무런 관계가 없다. 대신에 이들의 가치와 신념이야말로 실제 규제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고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하였고, 김태윤(2012)은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비차별성에 대한 연구"에서 '현실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규제는 이론적으로 시장실패에 기인하지 않으며, 정치적 편의나 국민들의 요구나 특수 이해관계 등에 따라 도입된 것이 많다는 것이다'라고 하며, 규제는 시장실패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도입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www.kci.go.kr

〈그림 1〉 분과학별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의 경향



(2) 규제의 타당성: 규제의 타당성은 RIA 등 비용편익분석적 접근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규제의 타당성은 RIA 등 비용편익분석적 접근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는 주장 내지는 관점의 전체 평균은 3.45점이었으며, 특히 행정학 분과의 평균이 3.86점으로 높아서 경제학 분과보다는 행정학 분과에서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김태윤·정재희·허가형(2008)은 "한국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의 수준: 평가틀의 도출 및 평가 결과"에서 '규제영향분석의 과정이 행정부의 규제남발을 제어하고 더욱 합리적인 규제대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고, 여차민·김태윤(2009), 이용환(1996), 김은자(1995) 등도 유사한 입장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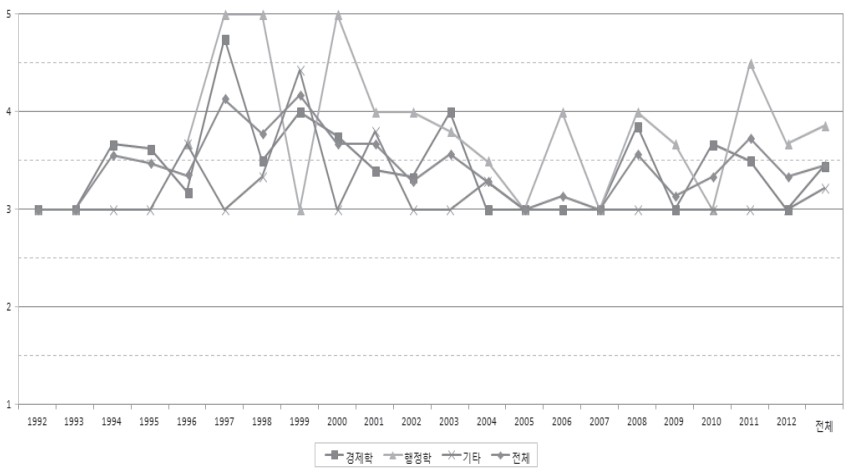
한편 분과학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규제연구들의 경향성을 살펴보면 <그림 2>와 같으며, 전 분야의 평균이 3점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었다. 특히 1997년에 1999년까지의 평균이 다른 해에 비해 높게 분포하고 있다.

www.kci.go.kr

〈표 11〉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의 경향

점수(점)	경제학		행정학		기타		전체	
	논문 수(편)	비율(%)	논문 수(편)	비율(%)	논문 수(편)	비율(%)	논문 수(편)	비율(%)
5	32	22.70	21	42.86	10	11.11	63	22.5
4	0	0.00	0	0.00	0	0.00	0	0.00
3	109	77.30	28	57.14	80	88.89	217	77.5
2	0	0.00	0	0.00	0	0.00	0	0.00
1	0	0.00	0	0.00	0	0.00	0	0.00
전체	141	100.00	49	100.00	90	100.00	280	100.00
평균	3.45		3.86		3.22		3.45	

〈그림 2〉 분과학별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의 경향



(3) 규제의 분류: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를 구분한다.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를 구분한다'는 주장 내지는 입장의 전체 평균은 3.15점이나, 규제분류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3점의 유형을 제외하고 보면, 규제연구에서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를 이원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은 관례처럼 되어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규제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분된다(4점)'가 31편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규제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분되며, 이 둘은 상당한 차별성이 존재한

www.kci.go.kr

다(5점)'가 8편으로 많았다.

〈표 12〉 규제의 분류에 대한 경향

점수(점)	경제학		행정학		기타		전체	
	논문 수(편)	비율(%)	논문 수(편)	비율(%)	논문 수(편)	비율(%)	논문 수(편)	비율(%)
5	4	2.84	2	4.08	2	2.22	8	2.9
4	14	9.93	14	28.57	3	3.33	31	11.1
3	123	87.23	31	63.27	84	93.33	238	85.0
2	0	0.00	1	2.04	1	1.11	2	0.7
1	0	0.00	1	2.04	0	0.00	1	0.4
전체	141	100.00	49	100.00	90	100.00	280	100.0
평균	3.16		3.31		3.07		3.15	

각 유형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분되며, 이 둘은 상당한 차별성이 존재한다(5점)'의 유형으로, 이병기(2008)는 "경제자유, 규제와 경제성장"에서 '정부규제는 그 대상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기업 및 개인의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경제규제와 사회적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적 규제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고, 서용구(1998), 김은자(1995), 이용환(2000) 등도 유사한 입장이었다. 둘째, '규제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분된다(4점)'유형이며, 규제의 분류에 대한 경향이 나타나는 대부분 논문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김성준(2002), 이혁우(2012) 등이 그러한 입장으로서, 직접적으로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가 구분된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규제가 이 둘로 분류되는 것을 암묵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를 구분하기 모호한 규제가 있다(2점)'의 유형으로서, 김동현 · 박형준 · 이용모(2011)는 "규제정책의 설계와 사회적 형성이론: 제한적 본인확인제 규제형성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구분에 의해서 설명되기 어려운 분야'로 경제적 규제인 진입규제와 청소년 보호규제가 혼합된 형태인 App시장의 게임시장을 규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곽노현(1993)은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강화논쟁"에서 '소비자보호법, 환경법, 산업재해법, 증뢰금지법 등 수많은 사회경제적 규제들이 제정되었다'라고 하며,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를 통합하여 "사회경제적 규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넷째,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

www.kci.go.kr

제는 특별한 차별성이 없다(1점)'의 유형으로, 김태윤(2012)은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비차별성에 대한 연구"에서 '규제의 실질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분류개념으로는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 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분석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하였다.

2. 규제정책에 관한 입장

(1) 규제분류별 규제개혁의 방향성: 경제적 규제는 줄이고, 사회적 규제는 늘려야 한다

'경제적 규제는 줄이고, 사회적 규제는 늘려야 한다'는 주장 내지는 입장, 관점은 단 10편의 논문에서만 나타났으며, 이 10편의 논문 모두 '규제정책적으로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를 구분하여 접근해야 한다(5점)'의 유형에 해당된다.

〈표 13〉 규제분류별 규제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평가의 경향

점수(점)	경제학		행정학		기타		전체	
	논문 수(편)	비율(%)	논문 수(편)	비율(%)	논문 수(편)	비율(%)	논문 수(편)	비율(%)
5	3	2.13	4	8.16	3	3.33	10	3.6
3	138	97.87	45	91.84	87	96.67	270	96.4
1	0	0.00	0	0.00	0	0.00	0	0.00
전체	141	100.00	49	100.00	90	100.00	280	100.00
평균	3.04		3.16		3.07		3.07	

김순양(1998)은 "사회적 규제와 중간 집단의 역할"에서 '그 동안 논의되어 온 규제개혁의 방향은 규제를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분할 경우에 주로 경제적 규제(특히 사전적 규제)를 완화하며, 사회적 규제는 오히려 합리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하였고, 또한 서순복(1996)도 "정보통신산업에서의 공정경쟁 규제정책"에서 '일반적으로 경제적 규제는 완화되어야 하지만, 사회적 공정경쟁규제는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구분을 가정하고 있으며, 경제적 규제는 줄여야 하

www.kci.go.kr

고, 사회적 규제는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노전표(2003), 신동선(2002) 등도 유사한 주장이나 입장이었다.

(2) 규제 및 규제완화의 필요성: 가능한 한 규제는 만들지 말아야 한다

'가능한 한 규제는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 내지는 입장의 전체 평균은 3.42점이며, 경제학 분과의 평균이 3.57점으로 행정학의 경우나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왔다.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지양해야 한다(4점)'가 82편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하나 그 과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2점)'가 64편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규제의 신설은 지양해야 한다/규제는 완화 및 폐지되어야 한다(5점)'도 53편으로 적지 않게 나타났다.

〈표 14〉 규제 및 규제완화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의 경향

점수(점)	경제학		행정학		기타		전체	
	논문 수(편)	비율(%)	논문 수(편)	비율(%)	논문 수(편)	비율(%)	논문 수(편)	비율(%)
5	33	23.40	9	18.37	13	14.44	53	18.9
4	44	31.21	18	36.73	29	32.22	82	29.3
3	35	24.82	15	30.61	25	27.78	78	27.9
2	28	19.86	0	0.00	21	23.33	64	22.9
1	1	0.71	7	14.29	2	2.22	3	1.1
전체	141	100.00	49	100.00	90	100.00	280	100.0
평균	3.57		3.45		3.33		3.42	

각 유형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의 신설은 지양해야 한다/규제는 완화 및 폐지되어야 한다(5점)'의 유형으로서, 김재홍(1995)은 "규제완화, 민영화의 경제정책적 분석"에서 '규제완화는 이러한 상황적 필요성에 대한 최선의 대안이었다. 정부의 통제와 간섭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규제완화정책이 기업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었음은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이었다'고 하였다. 최병선(1992), 최승재(2009), 김은경(2007), 김성천(1997) 등도 유사한 주장 내지는 입장이었다. 둘째,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지양해야 한다(4점)'의 유형으로서, 김솔 · 채지윤(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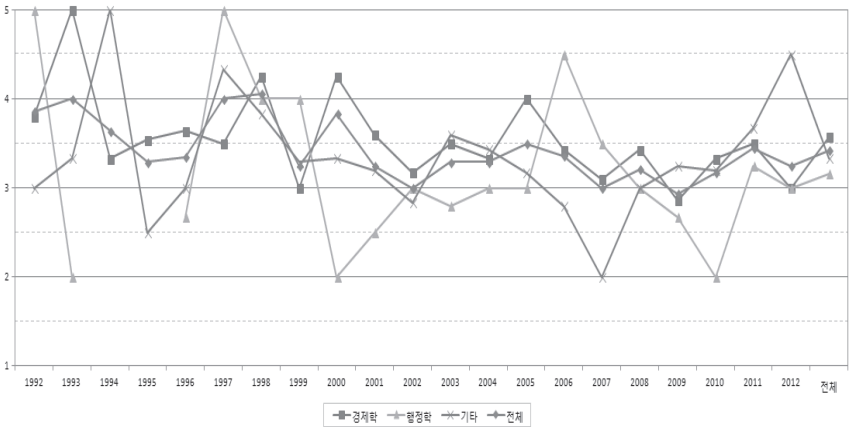
www.kci.go.kr

은 “주요국의 부동산 파생상품 및 시사점”에서 ‘규제에는 항상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며, 충분한 사전 고려 없이 근시안적으로 도입한 규제는 오히려 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걸림돌로 전락하기가 쉽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규제를 자꾸만 추가하기보다는 기존 제도의 활용 폭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방안을 잡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였다. 김순양(1998), 김종호(2008), 김유찬(2012), 김희성(2004) 등도 유사한 주장 내지는 입장이었다. 셋째,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하나 그 과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2점)’의 유형으로서, 김재홍(1992)은 “정부규제의 유형별 문제점 분석”에서 ‘기존의 규제제도의 개선에 모든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새로이 규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합리적인 규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규제 신설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규제는 합리적으로 만들어져야 하거나 품질이 높은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서순탁(1993), 이우권(2004), 김관호(2009) 등도 유사한 주장 내지는 입장이었다. 넷째,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규제를 신설 및 강화해서 대응해야 한다(1점)’의 유형으로서, 김명수(2011)는 “지역건설규제와 국제통상협약에 따른 시장변화”에서 ‘지역의무 공동 도급제도의 폐지는 각 지역업체에 엄청난 시장축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축소율이 높게 나타나며, 무엇보다 지역 간의 시장축소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고 하였고, 윤철홍(1995) 등도 유사한 주장 내지는 입장이었다.

한편 분과학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규제의 도입관련 규제정책에 대한 규제연구들의 경향성을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1990년대 초기에는 모든 분과학 분야 논문에서 규제의 신설 및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992년부터 1년씩 시차를 두고 행정학, 경제학, 기타 분과의 평균이 5점에 달하였다. 경제학 분과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시기에 평균이 전체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며, 행정학 분과의 경우, 평균의 변동폭이 크지만 2000년과 2005년 사이에서는 3점대 수준에서 변화가 거의 없었다.

www.kci.go.kr

〈그림 3〉 분과학별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규제 및 규제완화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의 경향



(3) 규제의 효과 및 결과: 규제를 통하여 국가의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규제를 통하여 국가의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주장 내지는 입장의 전체 평균은 3.33점이었으며, 경제학 분과의 평균이 3.51점으로 높았다. '규제를 통하여 국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5점)'가 54편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획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규제는 국가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4점)'가 41편으로 많았다. '규제를 통하여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일시적/단기적으로나마 해결해 나갈 수 있다(2점)'와 '국가가 당면한 문제는 규제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1점)'에 대한 주장 내지는 입장도 각각 19편씩 있었다.

〈표 15〉 규제의 효과 및 결과에 대한 평가의 경향

점수(점)	경제학		행정학		기타		전체	
	논문 수(편)	비율(%)	논문 수(편)	비율(%)	논문 수(편)	비율(%)	논문 수(편)	비율(%)
5	39	27.66	7	14.29	8	8.89	54	19.3
4	19	13.48	8	16.33	14	15.56	41	14.6
3	65	46.10	28	57.14	54	60.00	147	52.5
2	11	7.80	1	2.04	7	7.78	19	6.8
1	7	4.96	5	10.20	7	7.78	19	6.8
전체	141	100.00	49	100.00	90	100.00	280	100.0
평균	3.51		3.22		3.10		3.33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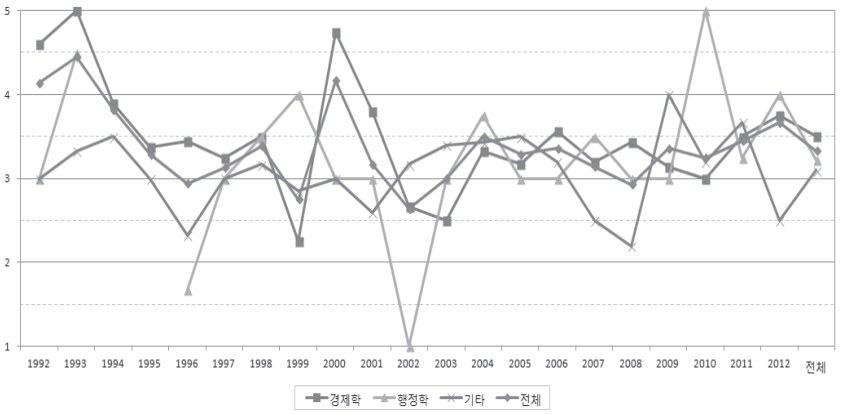
각 유형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를 통하여 국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5점)'의 유형이다. 원동철(1999)은 "전파시장의 법경제적 분석"에서 '만약 지금까지 당국이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시장거래를 허용하지 않고 일일이 규제와 간섭으로 접근해 왔다면 현재와 같은 형태의 시장이 형성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했을 것이다'고 하며, 규제의 도입이나 적용으로 인해 문제가 더 커졌거나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보고 있다. 김성배(2006), 사공영호(2004), 김문성·배형(2012) 등도 유사한 주장 내지는 입장이었다. 둘째, '계획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규제는 국가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4점)'의 유형이다. 이성우(1998)는 "고품질 규제를 위한 시장친화적 유인규제수단의 탐색"에서 '전통적 유형의 명령통제적 규제는 안정적이고 표준화된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 문제에 가장 적합하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기준에 맞는 문제는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는 시장기능을 전략적으로 이용한 유인규제의 방법을 연구, 도입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합리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보이며, 홍명수(2006), 박병무(1994) 등도 유사한 주장 내지는 입장이었다. 셋째, '규제를 통하여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일시적/단기적으로나마 해결해 나갈 수 있다(2점)'의 유형이다. 허석균(2012)은 "DTI, LTV 및 대출상환 조건이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견 DTI규제 도입이 결과적으로 강남지역에 투여되는 부동산 투자자금을 줄이는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하였다. 이는 특정분야에서 규제가 어느 정도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백욱인(2002), 조성한(1999) 등도 유사한 주장 내지 입장이었다. 넷째, '국가가 당면한 문제는 규제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1점)'의 유형이다. 유용봉(2000)은 "인터넷상의 해킹에 대한 형법적 규제"에서 '국내의 경우 개인, 기업, 국가기관 등 모두가 이 사이버 공간의 해킹행위에 의한 범죄에 의하여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여야 할 법적 개념의 부재와 규범의 적용상 문제점으로 인하여 법적 특히 형법적으로 시급하게 해결하고 규제하여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규제를 통하여 국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영평(2002), 김성준(2002) 등도 유사한 주장 내지 입장이었다.

한편 분과학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규제의 효과 및 결과에 대한 규제연구들의 경향성을 살펴보면 <그림 4>와 같다. 경제학 분과의 경우, 1999년과 2002년부터 2003년까지를 제외

www.kci.go.kr

하고는 전반적으로 평균이 높게 분포되어 있어, 규제의 효과 및 결과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 내지는 관점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 분과학별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규제의 효과 및 결과에 대한 평가의 경향



3. 규제의 정치경제학적 입장

(1) 규제기관 및 관료의 포획: 규제기관이나 관료는 포획된다

'규제기관이나 관료는 포획된다'는 주장이나 관점의 전체 평균은 3.39점으로 특히, 이와 같은 주장이나 관점은 경제학 분과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56편의 논문이 '규제기관이나 관료는 자체적인 사익이나, 외부의 이익관계에 종속되어 규제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5점)'라는 주장이나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표 16〉 규제기관 및 관료의 포획에 대한 평가의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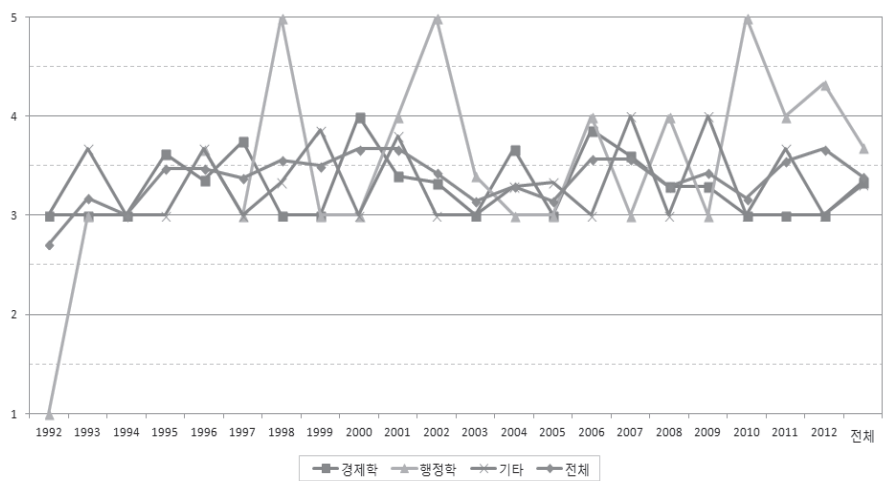
점수(점)	경제학		행정학		기타		전체	
	논문 수(편)	비율(%)	논문 수(편)	비율(%)	논문 수(편)	비율(%)	논문 수(편)	비율(%)
5	24	17.02	18	36.73	14	15.56	56	20.0
3	117	82.98	30	61.22	76	84.44	223	79.6
1	0	0.00	1	2.04	0	0.00	1	0.4
전체	141	100.00	49	100.00	90	100.00	280	100.00
평균	3.34		3.69		3.31		3.39	

www.kci.go.kr

하현상(2012)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규제개혁: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적 사용 기술개발의 규제개혁을 중심으로”에서 ‘정책결정자들은 전문가나 시민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깨끗한 지역환경과 경제성장에 대한 압력과 제안을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 이러한 영향관계에서 지방정부와 정책결정자들은 지역사회 그린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수단개발에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된다’고 하였고, 전영평(2002) 역시,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환경규제부처와 에너지관리부처 기능조정에 관한 연구”에서 ‘규제기관인 정부는 피규제기관의 논리, 정보, 영리적 제안, 퇴직 후 직장보장 등의 제안에 의해 포획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사공영호(2010), 박수혁(2001), 김재홍(1995), 이성우(1998) 등 여러 논문들이 이와 유사한 주장 내지 입장을 나타내고 있었다.

한편 분과학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규제기관 및 관료의 포획에 대한 규제연구들의 경향성을 살펴보면 <그림 5>와 같다. 행정학 분과에서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994년과 1995년과 사례수가 적어 돌출된 점수 분포를 보이고 있는 1998년과 2002년, 2010년을 제외하면, 전 분과학의 평균이 3점과 4점 사이에 분포하고 있어, 규제의 포획현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림 5〉 분과학별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규제기관 및 관료의 포획에 대한 평가의 경향



www.kci.go.kr

(2) 규제의 사익성: 규제관련 이익집단은 사익추구 행위를 한다

'규제관련 이익집단은 사익추구 행위를 한다'는 주장이나 관점의 전체 평균은 3.48점이었다. 67편의 논문이 '규제관련 이익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며, 현실의 규제는 이러한 상호작용의 결과이다(5점)'라는 주장이나 관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주장은 경제학 분과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표 17〉 규제의 사익성에 대한 평가의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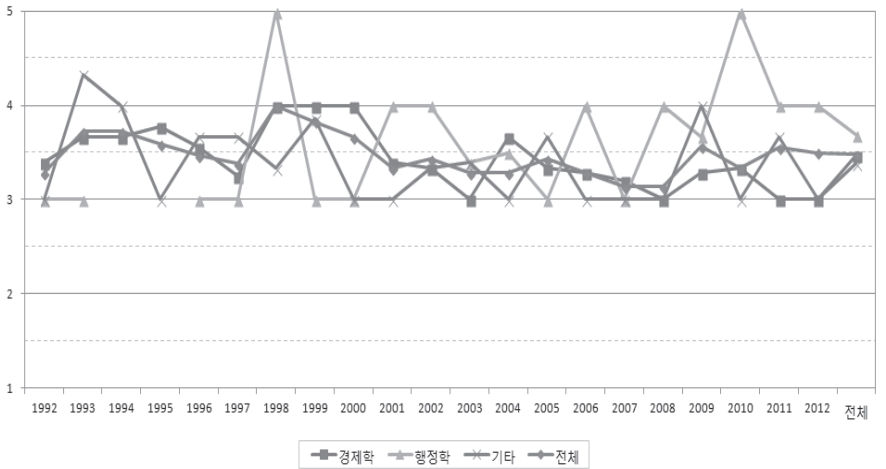
점수(점)	경제학		행정학		기타		전체	
	논문 수 (편)	비율(%)	논문 수 (편)	비율(%)	논문 수 (편)	비율(%)	논문 수 (편)	비율(%)
5	33	23.40	17	34.69	17	18.89	67	23.9
3	108	76.60	32	65.31	73	81.11	213	76.1
1	0	0.00	0	0.00	0	0.00	0	0.00
전체	141	100.00	49	100.00	90	100.00	280	100.00
평균	3.47		3.69		3.38		3.48	

박병무(1994)는 "기술개발 활동과 정부의 규제"에서 '규제의 성격이나 내용, 또는 대상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 집단은 때로는 정부당국 못지않게 규제의 성격이나 집행시한 등의 결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는 규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개입된다거나 이해관계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규제관련 이익집단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는 관점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최진욱(2006), 이용환(1996), 김동현·박형준·이용모(2011) 등 여러 논문들이 유사한 주장 내지 입장을 나타내고 있었다.

한편 분과학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규제의 사익성에 대한 규제연구들의 경향성을 살펴보면 <그림 6>과 같은바, 앞서 살펴본 규제기관 및 관료의 포획에 대한 규제연구들의 경향성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며, 규제관련 이익집단은 사익추구 행위를 한다는 관점도 규제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www.kci.go.kr

〈그림 6〉 분과학별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규제의 사익성에 대한 평가의 경향



(3) 규제의 수요: 일반국민이나 정치가들은 규제를 선호하여 수요한다

'일반국민이나 정치가들은 규제를 선호하여 수요한다'는 주장이나 관점의 전체 평균은 3.20점이었고, 이와 같은 주장은 경제학과 행정학 분과에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28편의 논문이 '일반국민이나 정치가들은 규제를 선호하여 사실상 수요한다(5점)'라는 주장이나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표 18〉 규제의 수요에 대한 경향성 평가

점수(점)	경제학		행정학		기타		전체	
	논문 수(편)	비율(%)	논문 수(편)	비율(%)	논문 수(편)	비율(%)	논문 수(편)	비율(%)
5	13	9.22	12	24.49	3	3.33	28	10.0
3	128	90.78	37	75.51	87	96.67	252	90.0
1	0	0.00	0	0.00	0	0.00	0	0.00
전체	141	100.00	49	100.00	90	100.00	280	100.00
평균	3.18		3.49		3.07		3.20	

이주선(2000)은 "일반의약품 표준소매가격규제 폐지의 경제학"에서 '규제는 자신들의 집단적 이익을 유지하거나 획득하려는 이익집단들에 의해서 수요되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정치적 연대를 이끌어 내려는 선출직 공직자들과 이들에 의해서 임명되는 관료들에 의해

www.kci.go.kr

서 공급된다'고 하여 '일반국민이나 정치가들은 규제를 선호하여 수요한다'는 입장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용환(2000)도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 중간 평가"에서 '지역구민의 이해가 걸린 경우에는 국회의원 스스로 지역의 이익을 위해 나선다. 이같은 활동은 다음 선거 시 유권자들의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회의원 역시 이해관계자가 된다'고 하였다. 김일중(1994), 김미경 · 라휘문 · 정용덕(1998), 전용덕(1993), 이혁우(2012) 등도 유사한 주장 내지 입장이었다.

4. 선진국의 규제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

(1) 선진국의 규제개혁제도에 대한 평가: 선진국의 규제개혁제도를 신뢰한다

'선진국의 규제개혁제도를 신뢰한다'는 입장이나 관점의 전체 평균은 3.54점으로, 82편의 논문이 '선진국의 규제개혁제도는 나름대로의 역사성과 사회성을 개입된 가운데, 상당히 높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선진국의 규제개혁제도는 신뢰할 수 있다(5점)'라는 입장이나 관점을 보이고 있다. 반면, '특별히 선진국의 규제개혁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1점)'는 6편이었다.

〈표 19〉 선진국의 규제개혁제도에 대한 평가의 경향

점수(점)	경제학		행정학		기타		전체	
	논문 수(편)	비율(%)	논문 수(편)	비율(%)	논문 수(편)	비율(%)	논문 수(편)	비율(%)
5	40	28.37	17	34.69	25	27.78	82	29.3
3	96	68.09	32	65.31	64	71.11	192	68.6
1	5	3.55	0	0.00	1	1.11	6	2.1
전체	141	100.00	49	100.00	90	100.00	280	100.00
평균	3.50		3.69		3.53		3.54	

'선진국의 규제개혁제도는 나름대로의 역사성과 사회성을 개입된 가운데, 상당히 높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선진국의 규제개혁제도는 신뢰할 수 있다(5점)의 유형을 살펴보면, 한현옥(2002)은 "전자상거래시대의 공정거래정책"에서 '아직 미국이나 EU처럼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독자적인 관련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한 경쟁정책당국의 인식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일반론적인 접근에 머물고 있다'고 하며, 미국

www.kci.go.kr

이나 EU처럼 우리나라의 규제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또한 강병호(2005)는 “우리나라 금융감독 및 자율규제체계에 관한 연구”에서 ‘선진국의 경우 공적 규제기구와 자율규제기구 간의 적절한 업무 및 권한배분을 통해 조화로운 규제체계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한 입장으로 김솔·채지윤(2010), 이주선(2001), 서순탁(1993) 등의 연구가 있다. 한편, ‘특별히 선진국의 규제개혁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1점)’의 유형으로는, 노전표(2003), 김금수(2000) 등의 연구가 있다.

(2) 선진국의 규제수준 및 품질에 대한 평가: 선진국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규제의 수준은 낙후되지 않았다

‘선진국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규제의 수준은 낙후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나 관점의 전체 평균은 3.14점으로, 20편의 논문이 ‘선진국의 일반적인 규제의 수준은 낙후되지 않았다(5점)’라는 입장이나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표 20〉 선진국의 규제수준 및 품질에 대한 평가의 경향

점수(점)	경제학		행정학		기타		전체	
	논문 수(편)	비율(%)	논문 수(편)	비율(%)	논문 수(편)	비율(%)	논문 수(편)	비율(%)
5	10	7.09	4	8.16	6	6.67	20	7.1
3	131	92.91	45	91.84	84	93.33	260	92.9
1	0	0.00	0	0.00	0	0.00	0	0.00
전체	141	100.00	49	100.00	90	100.00	280	100.00
평균	3.14		3.16		3.13		3.14	

김관호(2009)는 “국가안보 차원의 외국인직접투자 규제: 한국과 미국의 관련 규제의 비교고찰”에서 ‘미국은 자국의 규제가 국가안전의 보호라는 목표와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방적 환경의 조성이라는 경제적 목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선진국의 규제의 수준 및 품질이 우수하다는 관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입장으로 이성우(1998), 김태윤(2012) 등의 연구가 있다.

www.kci.go.kr

5. 우리나라의 규제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

(1)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제도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제도를 신뢰한다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제도를 신뢰한다'는 입장이나 관점의 전체 평균은 2.17점으로 선진국의 규제개혁제도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평균 3.54점)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체계내지는 내용이나 실질이 형식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1점)'라는 주장이나 관점을 가진 논문이 131편으로,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체계내지는 제도는 선진적이며 합당하다(5점)'가 15편인 것에 비해 매우 많았다.

〈표 21〉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제도에 대한 평가의 경향

점수(점)	경제학		행정학		기타		전체	
	논문 수(편)	비율(%)	논문 수(편)	비율(%)	논문 수(편)	비율(%)	논문 수(편)	비율(%)
5	6	4.26	4	8.16	5	5.56	15	5.4
3	71	50.35	14	28.57	49	54.44	134	47.9
1	64	45.39	31	63.27	36	40.00	131	46.8
전체	141	100.00	49	100.00	90	100.00	280	100.00
평균	2.18		1.90		2.31		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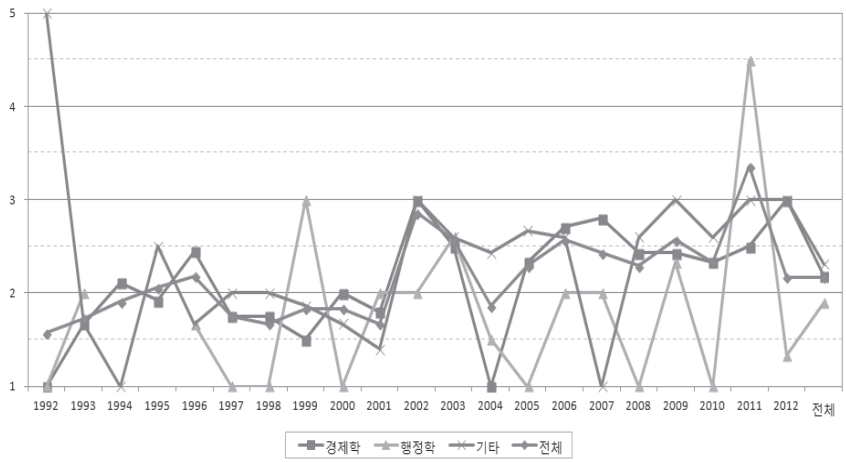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체계내지는 제도는 선진적이며 합당하다(5점)'의 유형을 살펴보면, 이혜영 외(2011)는 "금융부문의 유사행정규제에 관한 연구"에서 '현 정부 들어서는 규제개혁을 국정의 최고 우선순위로 설정하여 정책적 규제의 개혁, 제도 선진화를 추진했으며, 그 결과 실제 상당한 규제 정비 및 합리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한 입장으로 이재림 · 이상민(2003), 이혁우 외(2011) 등의 연구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체계내지는 제도는 뒤떨어져 있거나, 내용이나 실질이 형식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1점)'의 유형으로, 이종한 · 최진식(2012)은 "제도적 특성과 규제개혁의 상호보완관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OECD 국가의 생산물시장 규제를 중심으로"에서 '문제는 IMF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단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는 제도개혁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시장과 정부개입이라는 이분법적 논리에 갇혀 있었다고 볼 수 있

www.kci.go.kr

다'고 하였다. 또한 김태윤·양준석(2005)은 "규제개혁 국제지수의 개발"에서 '글로벌스탠더드의 차원에서 보면 한국은 아직도 규제체계가 중앙통제적이고 복잡하며 불투명하고, 다른 경쟁대상 국가에 비교하여 규제의 효율성 역시 뒤떨어져있다는 평가가 많다'고 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연구자는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최유성·최무현(2012), 김은자(1995), 조성한·주영종(2008) 등 여러 논문들이 유사한 주장 내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분과학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제도에 대한 평가에 대한 규제연구들의 경향성을 살펴보면 <그림 7>과 같다. 선진국의 규제개혁제도에 대한 평가의 경향성과 대조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고, 1992년에 기타 분과와 2011년 행정학 분과에서만 예외적으로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7〉 분과학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제도에 대한 평가의 경향



(2) 우리나라의 규제수준 및 품질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의 규제의 수준은 일반적으로 낙후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규제의 수준은 일반적으로 낙후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나 관점의 전체 평균은 2.53점으로, 선진국의 규제수준 및 품질에 대한 평가(평균 3.14점)와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규제의 수준은 낙후되어 있다(1점)'라는 주장이나 관점을 가진 논문이 71편으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규제의 수준은 높은 편이다(5점)'이 5편인 것에 비해 매우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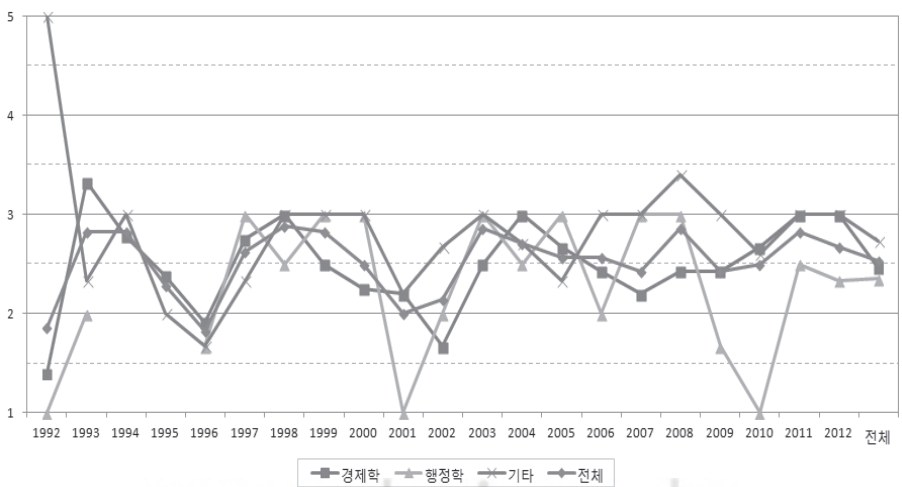
www.kci.go.kr

〈표 22〉 우리나라의 규제수준 및 품질에 대한 평가의 경향 평가

점수(점)	경제학		행정학		기타		전체	
	논문 수(편)	비율(%)	논문 수(편)	비율(%)	논문 수(편)	비율(%)	논문 수(편)	비율(%)
5	1	0.71	0	0.00	4	4.44	5	1.8
3	101	71.63	33	67.35	70	77.78	204	72.9
1	39	27.66	16	32.65	16	17.78	71	25.4
전체	141	100.00	49	100.00	90	100.00	280	100.00
평균	2.46		2.35		2.73		2.53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규제의 수준은 낙후되지 않았다(5점)'의 유형을 살펴보면, 김정수(1992)는 "우리나라 규제완화, 그 역사와 평가"에서 '행정규제완화 대상과제에 대해 정부는 새로운 개선대상의 지속적 발굴 및 이미 발굴된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등으로 규제완화에 대한 각 기관의 관심을 높여 규제완화대상의 65%를 조치 완료했거나 조치키로 합의하였다고 발표, 그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원흠(2008) 등도 유사한 주장 내지 입장이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규제의 수준은 낙후되어 있다(1점)'의 유형으로, 이혜영 외(2011)는 "금융부문의 유사행정규제에 관한 연구"에서 '금융부문에서 규제완화, 규제합리화에 대한 체감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림 8〉 분과학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우리나라의 규제수준 및 품질에 대한 평가의 경향



www.kci.go.kr

이재형(2002), 한선옥(1997), 전영평(2002), 김종호(2008) 등도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고, 규제의 품질 및 수준이 낮다는 관점을 지닌 연구들이다.

한편 분과학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의 규제수준 및 품질에 대한 평가에 대한 규제연구들의 경향성을 살펴보면 <그림 8>과 같다. 1992년과 2008년에 기타 분과와 1993년 경제학 분과만 예외적으로 평균점수가 3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규제수준 및 품질에 대한 규제연구자들이 지니고 있는 경향은 부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지난 20여 년간의 규제연구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규제연구」에 실린 유효한 논문들 전수를 대상으로 규제이론 및 규제정책에 관한 시각 등에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내용분석을 도입하여, 연구의 공식적인 주제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지니는 연구의 지향 및 규제개혁에 대한 입장이나 관점, 전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분과학별, 시기별로도 논문들의 경향성을 살펴보았으며, 각 주장내지는 입장 및 관점에 대한 대표적 유형의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규제이론에 관한 입장에서는 시장지향적이며 전통적인 주장이나 관점이 대체로 수용되고 있었다. 규제의 정당성은 시장실패에서 비롯된다는 관점과 규제의 타당성은 비용편익분석적 접근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관점, 규제가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분된다는 입장이 그것이다. 둘째, 규제정책에 관한 입장에서는 규제나 정부의 개입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이나 관점이 내재된 연구들이 많았다. 규제의 신설과 정부의 개입은 지양되어야 하고, 국가사회적 문제는 정부의 개입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셋째, 규제의 정치경제학적 입장인 규제기관 및 관료의 포획, 규제의 사익성, 규제의 수요 등에 대한 주장이나 관점도 대체로 수용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규제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에서는 선진국과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대조적으로 나왔다. 선진국의 규제개혁제도나 규제품질은 합리적이고, 우수하다는 입장이나 전제가 일반적이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규제개혁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규제의 품질도 낮다는 것이다. 한편 규제연구를 위한 핵심적 분과학인 행정학과 경제학 분야 논문들

www.kci.go.kr

간의 차별성이 눈에 띄는 점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대체로 규제의 정당성,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하여 경제학 분야 논문이 전반적으로 비교적 부정적인 경향이 견지되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행정학 분야 논문들의 주장이나 관점은 사안에 따라 다소 유연하고 다양한 입장을 보였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특징적인 것은, 규제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했던 1990년대 초반에는 규제완화 및 정부개입의 비효율성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IMF외환위기나 금융위기가 발생한 시점 이후에는 단기적으로 그러한 경향이 누그러지는 패턴을 보였다. 또한 경제학 분야의 논문들의 주장이나 관점이 비교적 큰 변화 없이 일관된 경향을 보이는 반면, 행정학 분야 논문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변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연구의 주된 주장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이 내면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관점이나 입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내용분석을 도입하였는바, 본 연구의 한계도 상당수 이 내용분석의 과정에 기인하고 있다. 우선, 방대한 텍스트에 대한 코딩과 해석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문제점이 있다. 코딩과정에서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매뉴얼을 만들고, 분석원들과 분석기준 및 항목의 이해를 위한 토론과정을 몇 차례 거쳤고, 코딩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오류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수차례의 교차검증을 실시하였으나 여전히 오류와 해석상의 이견이 남아 있을 수 있다. 둘째, 소수이기는 하지만 몇몇 항목의 경우 본 논문이 상정하고 있는 주된 주장내지는 입장 및 관점에 해당되지 않는 논문들의 수가 상당히 많았다. 그 결과 내용분석의 대상이 되는 논문의 유효수가 부족하여 보편적인 함의를 갖는 해석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셋째, 논문의 주된 주장과 논문에 내재되어 있는 연구자의 관점이나 입장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논문의 관찰에 있어 주장과 관점이나 입장의 상대적 경중을 헤아려 반영하지 못하였다. 주된 주장과 내면적인 관점이나 입장은 그 이론적 전개의 정교함과 함의에 있어 비중이 매우 다르므로 반드시 구별되어야 했지만 본 논문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향후에 본 연구의 방법론의 대강은 유지하면서 위의 한계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상의 보강과 정교한 분석과정을 적용한 보다 적절한 분석이 수행되기를 기대해본다.

www.kci.go.kr

참고문헌

고성호 외 역 · Earl Babbie저, 「사회조사방법론」, 도서출판 그림, 제11판, 2007.

김경동 · 이온죽, 「사회조사연구방법: 사회연구의 논리와 기법」, 서울:박영사, 1995.

김성철, 「유통산업의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 『유통연구』, 제2권 제2호, 1997.

김영훈, 「규제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선학사, 1995.

김태윤,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비차별성에 대한 연구」, 『규제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경제연구원, 2012.

_____, 「한국 규제영향분석 발전방안: 미국 및 우리나라의 사례연구를 토대로」, 『규제연구』, 제9권 제1호, 한국경제연구원, 2000.

김태윤 · 김상봉, 「비용편익분석의 이론과 실제: 공공사업평가와 규제영향분석」, 박영사, 2004.

노화준, 「고품질 규제발전을 위한 규제영향분석제도에 관한 연구: 미국 EPA의 사례분석과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책적 시사」, 『한국정책학회보』, 제14권 제4호, 2005.

여차민 · 김태윤, 「위험 및 안전규제 비용편익분석의 현실적 요건의 모색」, 『규제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경제연구원, 2009.

이민창, 「한국의 규제연구 경향분석」, 『지방정부연구』, 제7권 제3호, 한국지방정부학회, 2003.

지광석 · 김태윤,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모색 : 시장실패의 치유 vs. 거래비용의 최소화·경감」, 『한국행정학보』, 제44권 제2호, 한국행정학회, 2011.

최병선, 「규제수단과 방식의 유형 재분류」, 『행정논총』, 제47권 제2호,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1993.

_____, 「정부규제론: 규제와 규제완화의 정치경제」, 서울:법문사, 1992.

최병선 · 이혜영, 「한국의 규제정책 분야 실증연구의 경향과 분석」, 『행정논총』, 제39권 제3호,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1.

홍완식, 「규제개혁과 입법정책」, 『공법연구』 제36권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08.

Arrow, Kenneth, J. et al., *Benefit-Cost Analysis in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www.kci.go.kr

Regulation: A Statement of Principles, The Annapolis Center and Resources for the Future, 1996.

Bergson, A., "Communist Economic Efficiency Revisited",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82, 1992.

Buchanan, James M., Robert D. Tollison, and Gordon Tullock (ed.), *Toward a Theory of the Rent Seeking*, Texas A&M Univ. Press, 1980.

Dawson, J. W., "Regulation, Investment, and Growth", *Cato Journal* 26(3), Fall 2006.

Denison, Edward F., *Accounting for Slower Economic Growth*, Washington, D.C.: Brookings, 1979.

Djankov, S., C. McLiesh and R. Ramalho, "Regulation and Growth", *Economic Letters* 92, 2006.

Djankov, S., R. La Porta, F. Lopez-de-Silanes, and A. Shleifer, "The Regulation of Entry", *Harvard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Discussion Paper* 1904, 2000.

Feiock, Richard C. and Moon-Gi Jeong, "Regulatory Reform and Urban Economic Development", *State and Local Government Review* 34(3), 2002.

Gormley, William T. Jr., *The Politics of Public Utility Regulation*,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83.

Greer, Douglas F., *Business, Government, and Society*, 2nd ed., New York: McMillan Publishing Co., 1987.

Hahn, R. W. and Layburn, E. M., "Tracking the Value of Regulation", *Regulation* 26(3), 2003.

Hahn, R. W., Lutter, R. W. and Viscusi, W. K., *Do Federal Regulations Reduce Mortality?*, AEI Press, AEI-Brookings Joint Center for Regulation Studies, 2000.

Hart, Oliver, "Regulation and Sarbanes-Oxle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7(2), 2009.

Holsti, Ole R., *Content Analysis for the Social Science and Humanities*, MA: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69.

Kirkpatrick, Colin and Parker, David,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Developing its Potential For Use in Developing Countries", *CRC Working Paper Series*, 2003.

www.kci.go.kr

Koedijk, Kees, and Jeroen Kremers, “Market Opening, Regulation and Growth in Europe”, *Economic Policy* 11(23), 1996.

Lilley, William and Miller, James C., “The New Social Regulation”, *Public Interest* 47, Spring, 1977.

Loayza, N. V., Oviedo, A. M., and Serven, L., “The Impact of Regulation on Growth and Informality: Cross-Country Evidence”,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Series* 3623, The World Bank, 2005.

Lutter, R., “The Role of Economic Analysis in Regulatory Reform”, *Regulation* 22(2), 1999.

Medema, Steven G., “Another Look at the Problem of Rent Seeking”, *Journal of Economic Issues* 25(4), 1991.

Meier, Kenneth J., *Regulation: Politics, Bureaucracy, and Economic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5.

Mitnick, Barry M, *The Political Economy of Regulation: Creating, Designing, and Removing* Regulatory Forms, New York: Colombia University Press, 1980.

Morrall, J., “Saving Lives: A Review of the Record”, *Journal of Risk and Uncertainty* 27(3), 2003.

North, D.,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Nussbaum, M. C., “The Costs of Tragedy: Some Moral Limits of Cost-Benefit Analysis”, In Adler, M. D. & Posner, E. (eds.), *Cost-Benefit Analysis: Legal, Economic, and Philosophical Perspectives*,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OECD, *Regulatory Policies in OECD Countries,* Public Management Committee, Paris: OECD, 2002.

Peltzman, Sam, “Towards a General Theory of Regulatio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9(2), 1976.

Pigou, Arthur C., *The Economics of Welfare*. London: Macmillan and Co., 4th ed., 1938.

Pilat, D., “Regulation and performance in the distribution sector”,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 180, Paris: OECD, 1997.

www.kci.go.kr

Posner, Richard A., *How Judges Think,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OECD, 2008.

Ripley, Randall B. and Franklin, Grace A., *Policy Implementation and Bureaucracy* 2nd ed., Chicago, IL: The Dorsey Press, 1986.

Rodrik, D., Subramanian, A., and Trebbi, F., "Institutions Rule: The Primacy of Institutions Over Geography and Integration in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Economic Growth* 9, 2004.

Shleifer, A., and R. Vishny, "Politicians and Firm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9, 1994.

Shleifer, Andrei, *Efficient Regulation*, Cambridge, 2010.

Stigler, George J., "The Theory of Economic Regulation", *Bell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cience* 2, 1971.

Viscusi, W. K., Regulation of Health, Safety, and Environmental Risks. Related Publication 06-11, *AEI-Brookings Joint Center for Regulatory Studies*, 2006.

Woodrum, Eric., Mainstreaming Content Analysis in Social Science: Methodological Advantages, Obstacles, and Solutions, *Social Science Research* 13(1), 1984.

www.kci.go.kr

〈부록〉 '분석결과'에서 사례로 제시된 논문 목록

아래 <표>는 분석결과에서 사례로 제시된 논문들을 분석항목별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분류		저자	논문명	권(호)	출판연도
규제 이론에 관한 입장	규제의 정당성	최진욱 · 구교준	통신위원회 행정제재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분석	18(2)	2009
		김은자	규제영향평가의 기술적인 방법	(13)	1995
		이종한 · 최진식	제도적 특성과 규제개혁의 상호보완관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OECD 국가의 생산물시장 규제를 중심으로	21(1)	2012
		이용환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 중간 평가	9(2)	2000
		이혁우 외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의 필요성 연구	20(1)	2011
		김성준	규제연구의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 흡연에 대한 규제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11(2)	2002
		곽노선 · 김홍균 · 박정수	외환위기 이후의 금융정책에 대한 평가: 효율성과 시장친화성 기준으로	17(1)	2008
		이혁우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21(2)	2012
		허석균	DTI, LTV 및 대출상환 조건이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에 미치는 영향	21(2)	2012
		소성규	군사시설보호법의 발전적 적용방향	11(1)	2002
		김은자	규제영향평가의 기술적인 방법	(13)	1995
	규제의 타당성	김태윤 · 정재희 · 허가형	한국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의 수준: 평가틀의 도출 및 평가 결과	17(2)	2008
		여차민 · 김태윤	위험 및 안전규제 비용편익분석의 현실적 요건의 모색	18(1)	2009
		이용환	규제개혁 정책의 평가와 과제	(18)	1996
		김은자	규제영향평가의 기술적인 방법	(13)	1995
	규제의 분류	이병기	경제자유, 규제와 경제성장	17(2)	2008
		서용구	유통산업 분야의 규제개혁 방안에 관한 연구	7(2)	1998
		김은자	규제영향평가의 기술적인 방법	(13)	1995
		이용환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 중간 평가	9(2)	2000
		김성준	규제연구의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 흡연에 대한 규제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11(2)	2002
		이혁우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21(2)	2012
		김동현 · 박형준 · 이용모	규제정책의 설계와 사회적 형성이론: 제한적 본인확인제 규제형성 사례를 중심으로	20(2)	2011
		곽노현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강화논쟁	2(1)	1993
		김태윤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비차별성에 대한 연구	21(1)	2012

www.kci.go.kr

규제 정책에 관한 입장	규제 분류별 규제개혁의 방향성	김순양	사회적 규제와 중간 집단의 역할	7(1)	1998
		서순복	정보통신산업에서의 공정경쟁 규제정책	(18)	1996
		노전표	유통규제 국가비교 연구: OECD 국가를 중심으로	12(2)	2003
		신동선	화물자동차운송산업의 규제완화효과와 정책방향	11(2)	2002
	규제 및 규제완화의 필요성	김재홍	공익사업의 경제논리	(13)	1995
		최병선	경제적 규제완화 추진방식의 평가	(2)	1992
		최승재	부당지원행위와 터널링 규제에 대한 연구: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폐지가능성	18(2)	2009
		김은경	농지규제의 현황과 개선방향: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를 중심으로	16(1)	2007
		김성천	규제완화와 소비자보호규제	(21)	1997
		김솔·채지윤	주요국의 부동산 파생상품 규제연구 및 시사점	19(2)	2010
		김순양	사회적 규제와 중간 집단의 역할	7(1)	1998
		김종호	진입규제, 투자 그리고 경제성장	17(2)	2008
		김유찬	재정확보를 위한 숨은 세원 발굴 방안	21(2)	2012
		김희성	해고규제완화에 관한 연구	13(1)	2004
		김재홍	정부규제의 유형별 문제점 분석	창간	1992
		서순탁	규제완화와 국토이용 계획제도의 개편	2(2)	1993
		이우권	사이버 공간의 스팸메일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13(2)	2004
		김관호	국가안보 차원의 외국인직접투자 규제: 한국과 미국의 관련 규제의 비교 고찰	18(1)	2009
		김명수	지역건설규제와 국제통상협약에 따른 시장변화	20(1)	2011
		윤철홍	부동산실명제의 법률적 검토	(11)	1995
	규제의 효과 및 결과	원동철	전파시장의 법경제적 분석	8(2)	1999
		김성배	정부규제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의 타당성 분석: 팔당상수원관리구역의 경우를 중심으로	15(2)	2006
		사공영호	건설산업분야 사업자단체 규제의 개혁방안	13(2)	2004
		김문성·배형	서울 아파트 월세, 전세, 매매시장의 무차익 조건과 규제 및 규제완화 효과에 대한 시사점	21(2)	2012
		이성우	고품질규제를 위한 시장친화적 유인규제수단의 탐색	7(2)	1998
		홍명수	끼워팔기(Tying)와 결합판매(Bundling)의 규제법리의 비교와 규제체계 정립에 관한 고찰	15(1)	2006
		박병무	기술개발 활동과 정부의 규제	(8)	1994
		백욱인	사이버스페이스의 규제와 자율에 관한 연구	11(2)	2002
		조성한	전력산업의 회계분리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8(1)	1999
		유용봉	인터넷상의 해킹에 대한 형법적 규제	9(1)	2000

www.kci.go.kr

		전영평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환경규제부처와 에너지관리부처 기능조정에 관한 연구	11(2)	2002
		김성준	규제연구의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 흡연에 대한 규제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11(2)	2002
규제의 정치경제학적 입장	규제기관 및 관료의 포획	하현상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규제개혁: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적 사용 기술개발의 규제개혁을 중심으로	21(1)	2012
		전영평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환경규제부처와 에너지관리부처 기능조정에 관한 연구	11(2)	2002
		사공영호	지대추구의 사회화와 인지 · 개념체계화	19(2)	2010
		박수혁	전기사업법제도에 관한 규제완화	10(1)	2001
		김재홍	공익사업의 경제논리	(13)	1995
		이성우	고품질규제를 위한 시장친화적 유인규제수단의 탐색	7(2)	1998
	규제의 사익성	박병무	기술개발 활동과 정부의 규제	(8)	1994
		최진욱	규제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를 중심으로	15(1)	2006
		이용환	규제개혁 정책의 평가와 과제	(18)	1996
		김동현 · 박형준 · 이용모	규제정책의 설계와 사회적 형성이론: 제한적 본인확인제 규제형성 사례를 중심으로	20(2)	2011
	규제의 수요	이주선	일반의약품 표준소매가격규제 폐지의 경제학	9(1)	2000
		이용환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 중간 평가	9(2)	2000
		김일중	효율적인 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경제이론	(10)	1994
		김미경 · 라휘문 · 정용덕	한국 공정거래정책의 제도	7(1)	1998
		전용덕	공익사업 규제에 대한 시카고 학파의 비판과 대안	2(1)	1993
		이혁우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21(2)	2012
선진국의 규제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	선진국의 규제개혁제도에 대한 평가	한현옥	전자상거래시대의 공정거래정책	11(1)	2002
		강병호	우리나라 금융감독 및 자율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14(1)	2005
		김솔 · 채지윤	주요국의 부동산 파생상품 규제연구 및 시사점	19(2)	2010
		이주선	김대중행정부 민영화 정책 : 평가와 시사점	10(2)	2001
		서순탁	규제완화와 국토이용 계획제도의 개편	2(2)	1993
		노전표	유통규제 국가비교 연구: OECD 국가를 중심으로	12(2)	2003
		김금수	환경규제의 자율적 접근	9(2)	2000
	선진국의 규제수준 및 품질에 대한 평가	김관호	국가안보 차원의 외국인직접투자 규제: 한국과 미국의 관련 규제의 비교 고찰	18(1)	2009
		이성우	고품질규제를 위한 시장친화적 유인규제수단의 탐색	7(2)	1998
		김태윤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비차별성에 대한 연구	21(1)	2012

www.kci.go.kr

우리나라의 규제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제도에 대한 평가	이혜영 외	금융부문의 유사행정규제에 관한 연구	20(2)	2011
		이재림 · 이상민	교통요금규제의 운임수준에 미치는 영향분석 연구	12(1)	2003
		이혁우외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의 필요성 연구	20(1)	2011
		이종한 · 최진식	제도적 특성과 규제개혁의 상호보완관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OECD 국가의 생산물시장 규제를 중심으로	21(1)	2012
		김태윤 · 양준석	규제개혁 국제지수의 개발	14(2)	2005
		최유성 · 최무현	현행 규제등록제도하의 규제분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1(1)	2012
		김은자	제조물책임제도와 책임원리	(11)	1995
		조성한 · 주영종	조직문화가 규제 행태에 미치는 영향	17(1)	2008
	우리나라의 규제수준 및 품질에 대한 평가	김정수	우리나라 규제완화, 그 역사와 평가	창간	1992
		이원흠	지주회사와 대기업집단 규제의 정책효과에 대한 연구: 대리인비용의 추정을 중심으로	17(2)	2008
		이혜영 외	금융부문의 유사행정규제에 관한 연구	20(2)	2011
		이재형	부패에 관한 규제개혁의 효과와 구조적 변호의 추정	11(1)	2002
		한선옥	물류부문의 규제완화 정책 평가	(21)	1997
		전영평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환경규제부처와 에너지관리부처 기능조정에 관한 연구	11(2)	2002
		김종호	진입규제, 투자 그리고 경제성장	17(2)	2008

www.kci.go.kr

Journal of Regulation Studies Vol.22 No.2

A Critical Review of Regulatory Studies in Korea : Subject of Research and Tendency of Researchers

Lee, Su-Ah · Kim, Tae-Yun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rend of regulatory studies in regulatory theory and regulatory policy in Korea. For this purpose, it conducts a content analysis of 280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Regulation Studies』 from 1992 to 2012, focusing on not only subject of researches but also researcher's orientation and perspectives on regulatory reform.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regarding regulation theory, the market-oriented and traditional claims were generally accepted. Second, many studies expressed the negative view on regulation or the government's intervention. Third, the political economic perspectives of regulation such as the capture of regulatory bureaucrats, the private interest in regulation, the demand for regulation and so on were received generally . Fourth, the general trust in regulatory policy in advanced countries and Korea showed a contrasting result. Finally, there were the gap between the background expertise of researchers like public administration and economics of the legitimacy of regulation, the role of government, etc. and the difference of stance on deregulation and the inefficiency of government intervention.

Key words: Regulatory Study, Regulation Theory, Regulatory Policy, Political Economy of Regulation, Regulatory Reform, Content Analysis, Research Trend

www.kci.go.kr